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NABO Medium-Term Fiscal Projection: 2026~203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총 괄 | 한석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 | 이진우 조세분석심의관
김신애 추계세제총괄과장
예승우 경제비용추계과장
문지은 사회비용추계과장
김안나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추계 | 윤주철 (작성 총괄)
박정환 (국세수입 작성 총괄)
문지은 박선아 남 희 김우림
임슬기 정현수 이소임 전수연
이미연 강민지 김효경 이정훈
김주현 이유섭 박지원 신미정

경제전망 |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김원혁 이두영 천경록 백기홍

지 원 | 박혜림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역할과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 우리 산업의 전략 분야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의 안정화 기능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산정방식 개편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보다 감소하여 2030년에 GDP 대비 2.9% 수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49.0%로 계획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의무지출 관련 제도 변화, 재량지출 확대 등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 견조한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 규모가 커 전망기간 후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0년 기준으로 42.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총량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일러두기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명목GDP를 의미함
2. 연평균 증가율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기하평균으로 산출함
3. 각 표에서 "-"는 "0"을 포함한 유의한 수가 없는 경우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4.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차 례

요 약 / 1

Ⅰ. 개 요 / 1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1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 2
   가. 인구변수 ····· 2
   나. 거시경제변수 ····· 3
   다. 전망 방법 ····· 6
   라. 주요 정책 변화 ····· 7

Ⅱ. 중기재정전망 결과 / 11

1. 개 관 ····· 11
2. 총수입 전망 ····· 16
   가. 국세수입 ····· 16
   나. 국세외수입 ····· 25
3. 총지출 전망 ····· 30
   가. 의무지출 ····· 30
   나. 재량지출 ····· 55
4. 재정수지 전망 ····· 56
5. 국가채무 전망 ····· 63

Ⅲ.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67

1. 개 요 ····· 67
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 68

가. 거시경제변수 차이 ····· 68
나. 재정총량 차이 ····· 69
다. 주요 항목별 차이 ····· 71
3. 중기 재정운용 방향 분석 ····· 106

Ⅳ. 요약 및 결론 / 111

[부록] 항목별 전망방법 / 113

표 차례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 2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 3
[표 3]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 8
[표 4]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 9
[표 5]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 11
[표 6] 중기재정전망: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현행 수준 대비) ····· 14
[표 7]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 17
[표 8] 중기재정전망: 소득세 ····· 18
[표 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 19
[표 10]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소득세 ····· 19
[표 11] 중기재정전망: 법인세 ····· 20
[표 12]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 21
[표 13]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법인세 ····· 21
[표 14] 중기재정전망: 부가가치세 ····· 22
[표 15] 주요 정책 변화: 부가가치세 ····· 22
[표 16]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 22
[표 17] 중기재정전망: 기타 세목 ····· 23
[표 18]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 24
[표 19]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기타 세목 ····· 25
[표 20]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 25
[표 21] 중기재정전망: 세외수입 ····· 26
[표 22]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 ····· 27
[표 23]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 사회보장기여금 ····· 27
[표 24]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 사회보장기여금 ····· 28
[표 25]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 사회보장기여금 ····· 29
[표 26]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 연금수입 ····· 29
[표 27]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 연금수입 ····· 30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기금수입 ····· 30

[표 29]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 31
[표 30]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 의무지출 ····· 32
[표 31]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 의무지출 ····· 33
[표 32]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 의무지출 ····· 33
[표 33]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 의무지출 ····· 34
[표 34]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 의무지출 ····· 35
[표 35] 주요 정책 변화: 고용보험 의무지출 ····· 35
[표 36]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 의무지출 ····· 36
[표 37] 주요 정책 변화: 산재보험 의무지출 ····· 36
[표 38] 중기재정전망: 건강보험 의무지출 ····· 37
[표 39] 주요 정책 변화: 건강보험 의무지출 ····· 37
[표 40] 중기재정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 38
[표 41] 주요 정책 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 38
[표 42] 중기재정전망: 생계급여 ····· 39
[표 43] 주요 정책 변화: 생계급여 ····· 39
[표 44] 중기재정전망: 의료급여 ····· 40
[표 45] 주요 정책 변화: 의료급여 ····· 40
[표 46] 중기재정전망: 주거급여 ····· 41
[표 47] 중기재정전망: 교육급여 ····· 42
[표 48] 중기재정전망: 기초연금 ····· 42
[표 49] 주요 정책 변화: 기초연금 ····· 43
[표 50] 중기재정전망: 장애수당(기초) ····· 43
[표 51] 주요 정책 변화: 장애수당(기초) ····· 44
[표 52] 중기재정전망: 장애인연금 ····· 44
[표 53] 주요 정책 변화: 장애인연금 ····· 45
[표 54] 중기재정전망: 보훈 ····· 46
[표 55] 중기재정전망: 아동수당 ····· 46
[표 56] 주요 정책 변화: 아동수당 ····· 47
[표 57] 중기재정전망: 부모급여 ····· 47
[표 58] 주요 정책 변화: 부모급여 ····· 48
[표 59] 중기재정전망: 지방교부세 ····· 49
[표 60] 주요 정책 변화: 지방교부세 ····· 50
[표 61] 중기재정전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1

[표 62] 주요 정책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1
[표 63] 중기재정전망: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52
[표 64] 중기재정전망: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53
[표 65] 중기재정전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53
[표 66] 중기재정전망: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 ····· 54
[표 67] 중기재정전망: 기타 이자지출 ····· 54
[표 6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 55
[표 69]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 56
[표 70] 주요 정책 변화: 재량지출 ····· 56
[표 71]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 57
[표 72]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현행 수준 대비) ····· 58
[표 7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 64
[표 74]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현행 수준 대비) ····· 64
[표 75]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 67
[표 7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명목GDP 성장률 ····· 68
[표 7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 70
[표 7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명목GDP 및 국가채무 ····· 71
[표 79] 중기재정전망과 예산(안)의 비교: 소득세 ····· 74
[표 80] 중기재정전망과 예산(안)의 비교: 법인세 ····· 75
[표 81] 중기재정전망과 예산(안)의 비교: 부가가치세 ····· 75
[표 8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 ··· 76
[표 8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사학연금 사회보장기여금 ··· 77
[표 8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고용보험 사회보장기여금 ··· 77
[표 8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산재보험 사회보장기여금 ··· 78
[표 8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공무원연금 연금수입 ····· 80
[표 8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군인연금 연금수입 ····· 81
[표 8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국민연금 의무지출 ····· 82
[표 89]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사학연금 의무지출 ····· 83
[표 9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공무원연금 의무지출 ····· 84
[표 9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군인연금 의무지출 ····· 85
[표 9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고용보험 의무지출 ····· 86
[표 9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산재보험 의무지출 ····· 87
[표 9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건강보험 의무지출 ····· 88

[표 9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 89
[표 9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생계급여 …… 90
[표 9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의료급여 …… 91
[표 98] 주거급여 임차급여 집행액 추이 …… 92
[표 99]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주거급여 …… 93
[표 10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교육급여 …… 93
[표 10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기초연금 …… 95
[표 10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장애인연금 …… 96
[표 10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보훈 …… 98
[표 10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아동수당 …… 98
[표 10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부모급여 …… 99
[표 10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지방교부세 …… 100
[표 10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02
[표 10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102
[표 109]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지원 ·· 104
[표 11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 105
[표 111] 중기재정전망: 복지 분야별 의무지출 …… 108
[표 112] NABO 중기재정전망과 정부 계획의 차이: 복지 분야별 의무지출 … 108
[표 113]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량지출 계획 …… 109

그림 차례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 6
[그림 2] 관리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 58
[그림 3]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 65
[그림 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명목GDP 성장률 ····· 69
[그림 5] 관리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 107

요 약

Ⅰ. 개 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 추이를 전망

○ 이러한 전망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기준전망, baseline)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효과 추정

- 이때 “현행 수준”이란, 현행 재정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 증가나 물가 상승과 같은 통상적인 증감 요인을 반영한 재정 추이를 말하며,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기재정전망과 구분

❑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고, 중기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평가

○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를 재정총량 수준과 주요 항목별로 비교·분석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 인구변수는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 2026~2030년 추계치(중위 가정) 활용

○ 총 인구는 2026년 5,160.9만명에서 2030년 5,130.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출생아 수는 2026년 22.9만명(합계출산율 0.68명) 수준에서 2030년 26.3만명(합계출산율 0.82명)으로 증가할 전망

○ 65세 이상 인구는 2026년 1,112.5만명에서 2030년 1,298.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다만, 일부 인구변수의 경우 최근 실적 또는 NABO의 자체 인구전망(「NABO 인구전망 2025~2045」, 2025.12.11.) 반영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인구 수(만명)	5,160.9	5,153.5	5,146.0	5,138.4	5,130.6
(총 인구 증가율, %)	(△0.1)	(△0.1)	(△0.1)	(△0.1)	(△0.2)
출생아 수(만명)	22.9	23.9	24.8	25.7	26.3
합계출산율(명)	0.68	0.71	0.75	0.78	0.82
0~5세 인구 수(만명)	143.5	139.0	136.9	137.2	139.9
(0~5세 인구 비중, %)	(2.8)	(2.7)	(2.7)	(2.7)	(2.7)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1,112.5	1,159.7	1,212.5	1,252.1	1,298.0
(65세 이상 인구 비중, %)	(21.6)	(22.5)	(23.6)	(24.4)	(25.3)
사망자 수(만명)	36.9	37.9	39.0	40.0	41.1

자료: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26~2030년 거시경제 전망(「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활용

○ 실질GDP 성장률은 2026~2030년 중 연평균 2.7% 성장할 예상으로 이전 5년(2021~2025년)의 2.5%에 비해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

○ 명목GDP 성장률은 2026~2030년 중 연평균 8.7% 성장할 예상으로 2026년의 높은 수준(22.0%)에서 2027년 7.3%,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전망

- 2027년의 경우 실질GDP 성장률이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예상이며(3.5%→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26년에 비해서는 개선 폭이 줄어들(17.8%→4.4%) 전망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26~'30 평균
명목GDP 성장률	22.0	7.3	5.0	4.8	4.6	8.7
실질GDP 성장률	3.5	2.7	2.5	2.5	2.4	2.7
디플레이터	17.8	4.4	2.5	2.3	2.2	5.8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4	2.2	2.0	2.0	2.3
명목임금상승률	3.2	6.5	4.7	3.3	3.2	4.2
취업자 수 증감률	0.5	0.6	0.3	0.3	0.2	0.4
실업률	2.8	2.9	2.9	2.9	3.0	2.9
국고채금리(3년)	3.6	3.5	3.2	2.9	2.8	3.2
회사채금리(3년, AA-)	4.3	4.0	3.7	3.3	3.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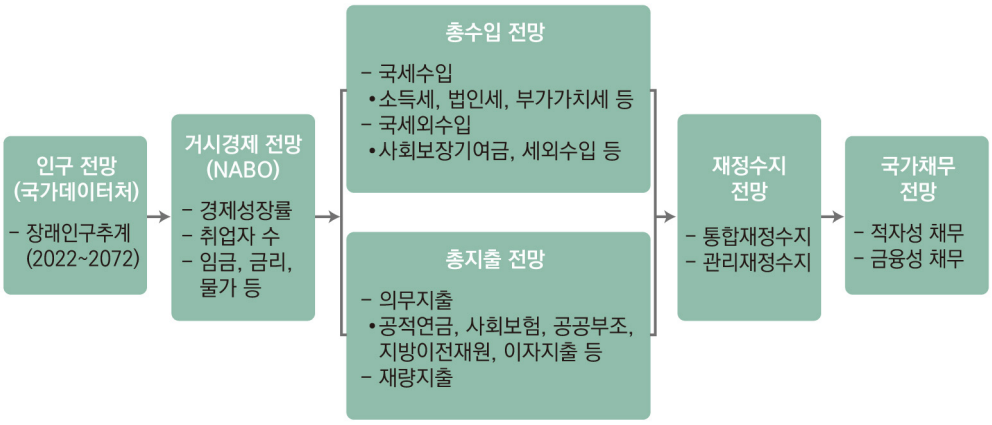
주: 평균은 기간 중 단순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전망 방법

❑ NABO 중기재정전망은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항목별 전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

○ 총수입 및 총지출의 각 항목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전망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주요 정책 변화

❑ NABO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새로 포함된 다음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 (국세수입) 「2026년 세법개정안」(2026.9.3.)의 종합부동산세 거주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및 세율인상 등 개편,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등

○ (의무지출) 현행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범위 및 산정방식 변경, 기초연금의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아동수당의 아동기본수당으로의 확대 개편 등

○ (재량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2030년 동안 2026년 본예산 대비 연평균 8.3% 증가(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

- 현행 수준(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수준)보다 높은 지출 계획을 정책 변화로 간주

주요 정책 변화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등 ○ (법인세)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제외 등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등 ○ (기타 세목) 종합부동산세 개편,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의무지출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 제외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명목GDP 및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기초연금)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27.4.~) 등 ○ (아동수당) 기존의 아동수당을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 ○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율 확대(2026년 11.9% → 2027년 12.3%)

<table>
<tr><th></th><th>주요 정책 변화</th></tr>
<tr><td>재량지출</td><td>○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2030년 동안 2026년 본예산 대비 연평균 8.3% 증가(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
(단위: 조원)
<table><tr><th>2025
결산</th><th>2026
본예산</th><th>2026
추경</th><th>2027
예산안</th><th>2028
계획</th><th>2029
계획</th><th>2030
계획</th></tr><tr><td>315.7</td><td>340.2</td><td>355.5</td><td>394.1</td><td>422.8</td><td>445.5</td><td>467.3</td></tr></table></td></tr>
</table>

Ⅱ. 중기재정전망 결과

1. 개 관

❑ 2027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국가채무는 2026년 1,413.7조원에서 2030년 1,711.4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 전망

○ 전망기간 동안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이 연평균 9.1% 증가하고, 재량지출 수준이 높아 전반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발생(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2.3~0.1%)

-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GDP 대비 24.0%)에서 2030년 1,012.1조원(25.1%)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GDP 대비 23.2%)에서 2030년 1,035.8조원(25.7%)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44.6조원 적자(GDP 대비 △1.4%), 2027년 4.3조원 흑자(0.1%), 2030년 92.1조원 적자(△2.3%)로 전망

○ 국가채무 금액은 전망기간 동안 증가하나, NABO의 명목GDP 수준이 높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43.3%에서 2030년 42.5%로 0.8%p 하락 예상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784.0	890.2	933.6	971.9	1,012.1	6.6
(전년 대비 증가율)	(23.0)	(13.5)	(4.9)	(4.1)	(4.1)	
국세수입	480.5	593.7	621.9	647.7	673.3	8.8
(전년 대비 증가율)	(28.5)	(23.5)	(4.8)	(4.2)	(4.0)	
국세외수입	303.5	296.5	311.7	324.2	338.7	2.8
(전년 대비 증가율)	(15.2)	(△2.3)	(5.1)	(4.0)	(4.5)	
총지출	756.5	827.2	909.1	982.4	1,035.8	8.2
(전년 대비 증가율)	(10.6)	(9.4)	(9.9)	(8.1)	(5.4)	
의무지출	400.9	433.1	486.3	536.9	568.5	9.1
(전년 대비 증가율)	(8.9)	(8.0)	(12.3)	(10.4)	(5.9)	
재량지출	355.5	394.1	422.8	445.5	467.3	7.1
(전년 대비 증가율)	(12.6)	(10.9)	(7.3)	(5.4)	(4.9)	
통합재정수지	27.5	62.9	24.5	△10.5	△23.7	
(GDP 대비 비율)	(0.8)	(1.8)	(0.7)	(△0.3)	(△0.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72.1	58.6	66.3	67.8	68.3	
(GDP 대비 비율)	(2.2)	(1.7)	(1.8)	(1.8)	(1.7)	
관리재정수지	△44.6	4.3	△41.8	△78.3	△92.1	
(GDP 대비 비율)	(△1.4)	(0.1)	(△1.1)	(△2.0)	(△2.3)	
국가채무	1,413.7	1,512.4	1,586.7	1,642.2	1,711.4	4.9
(전년 대비 증가율)	(8.3)	(7.0)	(4.9)	(3.5)	(4.2)	
(GDP 대비 비율)	(43.3)	(43.2)	(43.2)	(42.6)	(4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로 2030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99.3조원(GDP 대비 비율 2.5%p) 증가 전망

○ 주요 정책 변화로 총수입은 2027년부터 2030년 동안 총 10.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수입의 세수 증가효과(10.4조원)가 대부분을 차지

○ 총지출은 2027년부터 2030년 동안 총 158.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으로 의무지출은 132.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량지출은 291.4조원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는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38.2조원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3.4조원 감소
- 재량지출의 경우 현행 수준(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수준으로 가정)에 비해 연간 45.7~96.8조원 증가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91.4조원 증가

○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2027년의 경우 관리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어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 예상

중기재정전망: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현행 수준 대비)

(단위: 조원, %p)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총수입 변화	—	0.7	2.6	3.4	3.6	10.4
국세수입	—	0.7	2.6	3.4	3.6	10.4
국세외수입	—	0.0	0.0	0.0	0.0	0.0
총지출 변화	—	△16.7	28.0	65.8	81.8	158.9
의무지출	—	△62.3	△38.7	△16.5	△15.0	△132.5
재량지출	—	45.7	66.6	82.3	96.8	291.4
통합재정수지 변화	—	17.4	△25.3	△62.3	△78.2	△148.4
(GDP 대비 비율)	—	(0.5)	(△0.7)	(△1.6)	(△1.9)	
관리재정수지 변화	—	17.4	△25.3	△62.3	△78.1	△148.5
(GDP 대비 비율)	—	(0.5)	(△0.7)	(△1.6)	(△1.9)	
국가채무 변화	—	△17.4	8.0	47.8	99.3	
(GDP 대비 비율)	—	(△0.5)	(0.2)	(1.2)	(2.5)	

주: 표 안의 수치는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총수입 전망

❑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GDP 대비 24.0%)에서 2030년 1,012.1조원(25.1%)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784.0	890.2	933.6	971.9	1,012.1	6.6
(GDP 대비 비율)	(24.0)	(25.4)	(25.4)	(25.2)	(25.1)	
국세수입	480.5	593.7	621.9	647.7	673.3	8.8
(GDP 대비 비율)	(14.7)	(16.9)	(16.9)	(16.8)	(16.7)	
소득세	152.1	181.7	188.9	195.9	203.0	7.5
법인세	138.3	222.1	232.3	242.8	253.4	16.3
부가가치세	88.2	93.3	97.9	102.4	107.0	4.9
기타	101.9	96.7	102.8	106.6	109.9	1.9
국세외수입	303.5	296.5	311.7	324.2	338.7	2.8
(GDP 대비 비율)	(9.3)	(8.5)	(8.5)	(8.4)	(8.4)	
세외수입	40.0	39.3	37.4	35.4	35.6	△2.8
기금수입	263.5	257.1	274.3	288.8	303.1	3.6
사회보장기여금	104.4	111.1	118.7	125.9	133.4	6.3
연금수입	21.6	22.0	23.5	25.1	26.1	4.8
기타	137.5	124.1	132.2	137.8	143.6	1.1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세수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경제지표 전망 등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GDP 대비 14.7%)에서 2030년 673.3조원(16.7%)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전망

○ 2027년 이후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인 법인세(전망기간 중 연평균 16.3% 증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세(7.5%), 부가가치세

(4.9%) 등 기간세목도 견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소득세는 2026년 152.1조원에서 2030년 203.0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2027년 임금상승 등 요인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 2027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할 전망

※ 명목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 등 고용지표의 지속 개선을 전제

○ 법인세는 2026년 138.3조원에서 2030년 253.4조원으로 연평균 1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2026년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 2027년 74.3% 증가한 후,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에 따라 2028년 이후 연 4%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법인세 원천분은 2027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와 배당 확대 등에 따라 3.3% 증가한 후, 2028년 이후 금융자산 증가세 둔화와 금리 안정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회사채금리 추이(3년물, AA-, %): ('25년) 3.0 ('26년) 2.8 ('27~'29년) 2.9

○ 부가가치세는 2026년 88.2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

- 내수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견조한 증가세 예상

※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26~'30년 연평균, %): 3.9

○ 기타 세목은 2026년 101.9조원에서 2030년 109.9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전망

- 기타 소비세수는 민간소비 증가 및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의 영향으로 2026년 38.1조원에서 2030년 43.0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는 2026년 63.8조원에서 2027년 상속세 연부연납분 감소, 증권거래대금 감소 전망 등으로 56.7조원으로 감소한 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30년 66.9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전망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2026년 303.5조원(GDP 대비 9.3%)에서 2030년 338.7조원(8.4%)으로 연평균 2.8% 증가 전망

○ 세외수입은 2028년 이후 회계·기금 간 이관, 한국은행잉여금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6년 40.0조원에서 2030년 35.6조원으로 연평균 2.8% 감소 전망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높은 증가율에 힘입어 2026년 263.5조원에서 2030년 303.1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 예상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명목임금상승 등에 따라 2026년 104.4조원에서 2030년 133.4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 연금수입(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역시 2026년 21.6조원에서 2030년 26.1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기금수입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몰 도래(2027년 말), 융자원금회수의 부진 등으로 2026년 137.5조원에서 2030년 143.6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

3. 총지출 전망

❑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GDP 대비 23.2%)에서 2030년 1,035.8조원(25.7%)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756.5	827.2	909.1	982.4	1,035.8	8.2
(GDP 대비 비율)	(23.2)	(23.6)	(24.7)	(25.5)	(25.7)	
의무지출	400.9	433.1	486.3	536.9	568.5	9.1
(GDP 대비 비율)	(12.3)	(12.4)	(13.2)	(13.9)	(14.1)	
(총지출 대비 비중)	(53.0)	(52.4)	(53.5)	(54.6)	(54.9)	
복지 분야	199.9	221.2	236.4	254.0	273.8	8.2
공적연금	94.9	102.9	110.4	119.2	129.6	8.1
사회보험	42.6	45.5	47.9	50.1	52.4	5.4
공공부조	47.0	56.6	62.2	67.6	73.7	11.9
기타	15.4	16.3	15.9	17.0	18.0	4.0
지방이전재원	154.4	160.0	194.3	224.9	234.7	11.0
이자지출	33.8	38.1	41.1	43.2	44.7	7.2
기타 의무지출	12.9	13.9	14.5	14.8	15.3	4.4
재량지출	355.5	394.1	422.8	445.5	467.3	7.1
(GDP 대비 비율)	(10.9)	(11.3)	(11.5)	(11.6)	(11.6)	
(총지출 대비 비중)	(47.0)	(47.6)	(46.5)	(45.4)	(4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2026년 400.9조원(GDP 대비 12.3%)에서 2030년 568.5조원(GDP 대비 14.1%)으로 연평균 9.1% 증가 전망

○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 사업별로 수급 요건과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전망

- 복지 분야 의무지출(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은 연금제도 성숙

및 인구고령화, 그리고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2026년 199.9조원에서 2030년 273.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

-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국세수입 및 명목 GDP 증가 등으로 2026년 154.4조원에서 2029년 234.7조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
- 이자지출(국고채 이자지출, 우체국예금이자 등)은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2026년 33.8조원에서 2030년 44.7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
- 기타 의무지출은 2026년 12.9조원에서 2030년 15.3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

○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53.0%에서 2030년 54.9%로 상승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26년 355.5조원(GDP 대비 10.9%)에서 2030년 467.3조원(11.6%)으로 연평균 7.1% 증가 전망

○ 재량지출 전망은 2026년의 경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 2027~2030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으로 반영

○ 현행 수준의 재량지출(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에 비해 연간 45.7~96.8조원 증가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91.4조원 증가

4. 재정수지 전망

❑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 27.5조원 흑자(GDP 대비 0.8%), 2027년 62.9조원 흑자(1.8%), 2030년 23.7조원 적자(△0.6%)로 전망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전반적으로 국세수입의 증가세로 인해 흑자를 보이나,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전망기간 후반인 2029년에는 적자로 전환 예상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규모는 2026년 72.1조원(GDP 대비 2.2%)에서 2030년 68.3조원(1.7%)으로 전망

○ 2026년의 흑자 규모가 큰 이유는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44.6조원 적자(GDP 대비 △1.4%), 2027년 4.3조원 흑자(0.1%), 2030년 92.1조원 적자(△2.3%)로 전망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망기간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규모 축소 등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다만,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흑자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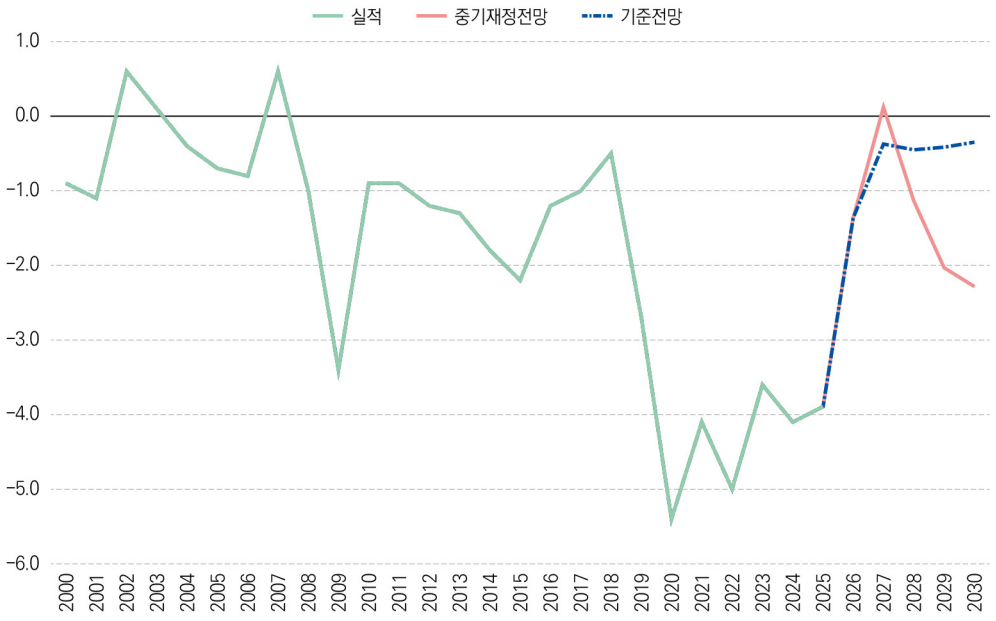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통합재정수지	27.5	62.9	24.5	△10.5	△23.7
(GDP 대비 비율)	(0.8)	(1.8)	(0.7)	(△0.3)	(△0.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72.1	58.6	66.3	67.8	68.3
(GDP 대비 비율)	(2.2)	(1.7)	(1.8)	(1.8)	(1.7)
관리재정수지	△44.6	4.3	△41.8	△78.3	△92.1
(GDP 대비 비율)	(△1.4)	(0.1)	(△1.1)	(△2.0)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관리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가채무 전망

❑ 국가채무는 2026년 1,413.7조원에서 2030년 1,711.4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 전망

○ 국가채무 금액은 전망기간 동안 증가하나, NABO의 명목GDP 수준이 높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43.3%에서 2030년 42.5%로 0.8%p 하락 예상

○ (중앙정부 채무) 2026년 1,377.0조원(GDP 대비 42.2%)에서 2030년 1,673.7조원(41.5%)으로 연평균 5.0% 증가

- 이 중 적자성 채무는 2026년 987.7조원(GDP 대비 30.2%)에서 2030년 1,251.8조원(31.1%)으로 연평균 6.1% 증가

○ (지방정부 순채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

- 2026년 36.7조원(GDP 대비 1.1%)에서 2030년 37.7조원(0.9%)으로 연평균 0.7% 증가 전망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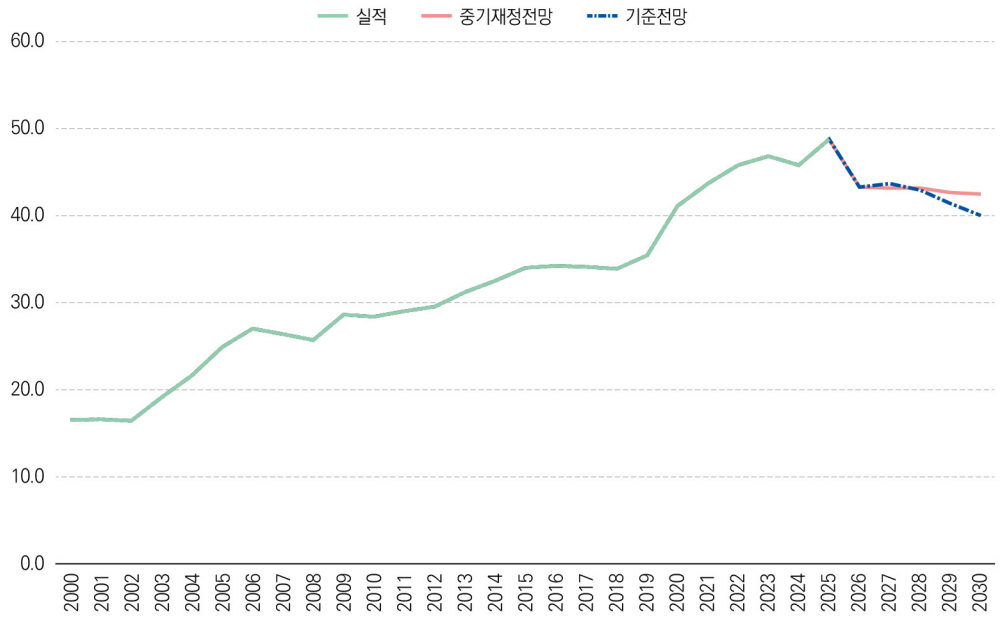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A+B)	1,413.7	1,512.4	1,586.7	1,642.2	1,711.4	4.9
(GDP 대비 비율)	(43.3)	(43.2)	(43.2)	(42.6)	(42.5)	
중앙정부 채무(A)	1,377.0	1,475.3	1,549.3	1,604.6	1,673.7	5.0
(GDP 대비 비율)	(42.2)	(42.1)	(42.1)	(41.6)	(41.5)	
적자성 채무	987.7	1,072.6	1,141.4	1,191.2	1,251.8	6.1
(GDP 대비 비율)	(30.2)	(30.6)	(31.0)	(30.9)	(31.1)	
금융성 채무	389.3	402.7	408.0	413.3	421.9	2.0
(GDP 대비 비율)	(11.9)	(11.5)	(11.1)	(10.7)	(10.5)	
지방정부 순채무(B)	36.7	37.1	37.4	37.6	37.7	0.7
(GDP 대비 비율)	(1.1)	(1.1)	(1.0)	(1.0)	(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 개 요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2030년 동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0.1~△2.9%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 49.0%로 전망

- ○ 총수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700.6조원에서 2030년 984.6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
- ○ 총지출은 같은 기간 753.0조원에서 1,005.2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본예산	추경	예산안	계획	계획	계획	증가율
총수입	675.2	700.6	880.8	920.5	951.8	984.6	8.9
국세수입	390.2	415.4	584.4	606.7	625.5	644.8	11.6
국세외수입	285.0	285.2	296.4	313.7	326.2	339.7	4.5
총지출	727.9	753.0	820.9	894.6	957.4	1,005.2	7.5
의무지출	387.7	397.5	426.8	471.9	511.8	537.9	7.9
재량지출	340.2	355.5	394.1	422.8	445.5	467.3	7.1
통합재정수지	△52.7	△52.5	59.9	25.8	△5.6	△20.6	
(GDP 대비 비율)	(△1.9)	(△1.9)	(1.9)	(0.8)	(△0.2)	(△0.6)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3.1	△48.0	△83.5	△100.8	
(GDP 대비 비율)	(△3.9)	(△3.8)	(△0.1)	(△1.5)	(△2.5)	(△2.9)	
국가채무	1,413.8	1,412.8	1,519.8	1,600.3	1,659.1	1,734.1	5.3
(GDP 대비 비율)	(51.6)	(50.6)	(48.3)	(48.9)	(48.8)	(49.0)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GDP 대비 비율에 반영한 명목GDP는 정부 전망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 9.

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 (거시경제변수 차이) NABO가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의 경우 22.0%로 정부보다 9.7%p 높은 수준이며, 이후 하락 추세는 정부와 동일하나 전망기간 동안 정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명목GDP 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전망치뿐 아니라 재정총량의 GDP 대비 비율 또한 차이 발생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명목GDP 성장률

(단위: %, %p)

	2026	2027	2028	2029	2030
중기재정전망(A)	22.0	7.3	5.0	4.8	4.6
국가재정운용계획(B)	12.3	4.6	4.0	4.0	4.0
차이(A-B)	9.7	2.7	1.0	0.8	0.6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 아닌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2026.7.14.)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정부

❑ (재정총량 차이)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한 재정경로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부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

○ (총수입) 총수입의 경우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53.6조원 큰데, 이러한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국세수입을 140.3조원 크게 전망한데 주로 기인

- 정부의 2026년도 세수 재추계(2026.9.30.) 기준으로 비교하면, NABO 국세수입은 정부보다 5년 동안 77.1조원 클 것으로 전망되며, 총수입은 NABO가 정부보다 90.5조원 클 것으로 전망

○ (총지출) 총지출 역시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큰데, 그 수준은 79.9조원 모두 의무지출 차이에서 비롯

-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해 NABO가 정부보다 51.9조원 크게 전망하였으며,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명목GDP 및 학령인구 변화율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NABO의 국세수입과 명목GDP가 정부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이전재원은 38.0조원 클

것으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 5년 합계 기준으로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크지만 상대적으로 총수입이 더 크므로 재정수지는 NABO가 정부보다 양호

-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경우 NABO의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연금지출 등)이 정부보다 커 중기재정전망의 흑자 규모가 정부보다 5년 동안 16.8조원 작을 것으로 예상

○ (국가채무)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보다 작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2030년 누적으로 22.7조원 수준

- 다만, 국가채무 비율 차이는 NABO의 명목GDP 수준이 정부보다 높기 때문에 국가채무 금액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2030년 기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6.6%p 낮은 수준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단위: 조원, %p)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총수입 차이	83.4	9.4	13.1	20.1	27.5	153.6
국세수입 차이	65.1 (1.9)	9.3	15.2	22.2	28.5	140.3 (77.1)
국세외수입 차이	18.3	0.1	△2.0	△2.1	△1.0	13.4
총지출 차이	3.4	6.4	14.5	25.0	30.6	79.9
의무지출 차이	3.4	6.4	14.5	25.0	30.6	79.9
복지 분야	3.4	7.9	10.4	13.2	17.1	51.9
지방이전재원	0.0	0.4	5.6	14.3	17.7	38.0
이자지출	0.1	△1.9	△1.5	△2.5	△4.3	△10.1
기타 의무지출	—	—	—	—	—	—
재량지출 차이	—	—	—	—	—	—
통합재정수지 차이	80.0	3.1	△1.3	△4.9	△3.1	73.7
(GDP 대비 비율)	(2.7)	(△0.1)	(△0.1)	(△0.1)	(△0.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차이	17.0	△4.3	△7.6	△10.0	△11.8	△16.8
(GDP 대비 비율)	(0.2)	(△0.3)	(△0.5)	(△0.5)	(△0.6)	
관리재정수지 차이	63.0	7.4	6.2	5.2	8.7	90.5
(GDP 대비 비율)	(2.5)	(0.2)	(0.3)	(0.4)	(0.6)	
국가채무 차이	0.0	△7.4	△13.6	△16.9	△22.7	
(GDP 대비 비율)	(△7.3)	(△5.2)	(△5.8)	(△6.2)	(△6.6)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뺀 값으로, 양(+)의 값이면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나, 국가채무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1,412.8조원)이 아니라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전망치(1,413.7조원) 기준임
3. 국세수입의 괄호안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2026.9.30.)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정부

3. 중기 재정운용 방향 분석

❑ 2027년 이후 높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망기간 후반에 확대될 전망

○ NABO 중기재정전망 및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모두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할 경우 2027년에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보다 크게 개선되나, 이러한 수지 개선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 2027년 NABO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2026년 전망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7년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32.2조원(8.0%) 증가, 재량지출은 예산안상 394.1조원으로 전년 대비 38.6조원(10.9%) 증가하여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흑자 예상

○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5.9~12.3%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4.9~7.3% 증가하는 수준으로 계획되어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28년 △41.8조원, '29년 △78.3조원, '30년 △92.1조원)

❑ 전망기간 동안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과 높은 수준의 재량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전망보다 5년 동안 51.9조원 클 것으로 예상

- 복지 분야의 하위 부문별로 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NABO 전망이 정부보다 5년 합계 22.7조원 크고, 사회보험은 15.3조원, 공공부조는 12.2조원, 기타복지는 1.7조원 클 것으로 전망

○ 또한, 높은 수준의 재량지출 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세수 증가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재량지출 계획은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

Ⅳ. 요약 및 결론

❑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NABO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여 자체 거시경제전망과 전망모형 등에 근거하여 전망한 결과 제시

- ○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GDP 대비 24.0%)에서 2030년 1,012.1조원(25.1%)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GDP 대비 23.2%)에서 2030년 1,035.8조원(25.7%)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44.6조원 적자(GDP 대비 △1.4%), 2027년 4.3조원 흑자(0.1%), 2030년 92.1조원 적자(△2.3%)로 전망
- ○ 국가채무는 2026년 1,413.7조원(GDP 대비 43.3%)에서 2030년 1,711.4조원(42.5%)으로 연평균 4.9% 증가 전망

❑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현행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정부 세법개정안,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개편 및 재량지출 확대 등이 장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효과 등으로 총수입은 현행 수준에 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4조원 커질 것으로 예상
- ○ 총지출은 의무지출이 감소함에도 재량지출 증가가 이를 초과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8.9조원 커질 것으로 전망
- ○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의 경우 개선되나, 2028년 이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채무는 2030년 기준으로 99.3조원 증가(GDP 대비 비율은 2030년 기준으로 2.5%p 상승 예상)

❑ NABO의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한 재정경로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부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

- ○ 총수입의 경우 NABO 전망이 정부에 비해 5년 동안 153.6조원 큰데, 이는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140.3조원 크기 때문(정부의 세수 재추

계 기준으로는 77.1조원)

- ○ 의무지출의 경우 NABO의 높은 세수 증가세와 명목GDP 성장 등으로 NABO가 정부보다 79.9조원 크고 증가율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5년 동안 51.9조원 큰 규모

❑ 높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망기간 후반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 NABO 중기재정전망 및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모두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할 경우 2027년에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보다 크게 개선되나, 이러한 수지 개선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 ○ 2027년에 일시적으로 개선된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그 규모 또한 확대 예상('28년 △41.8조원, '29년 △78.3조원, '30년 △92.1조원)

Ⅰ. 개 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정부는 지난 9월 3일「2027년도 예산안」및 향후 5개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계획을 담은「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880.8조원, 총지출은 820.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180.2조원 증가(25.7%), 총지출은 67.8조원 증가(9.0%)한 규모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중기적 시계에서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 이후 GDP 대비 △0.1~△2.9%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2030년 기준 1,734.1조원(GDP 대비 49.0%[1])으로 계획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의「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하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한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기준전망, baseline)[2]과 비교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를 추정한다. 또한,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

본 보고서는 1장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기초변수인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2027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주요 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주요 항목별로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번 정책 변화가 재정에 어떠한

1) 이때 GDP는 정부의 명목GDP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이때 현행 수준이란, 현행 재정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 증가나 물가 상승과 같은 통상적인 증감 요인을 반영한 재정 추이를 의미하며,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기재정전망과 구분된다.

영향을 미치는지를 현행 수준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3장에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비교하여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 4장에서는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요약한다.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 12.)의 2026~2030년 추계치(중위 가정)를 기준으로 한다.[3)]

중기재정전망에 적용한 총 인구 수는 2026년 5,160.9만명에서 2030년 5,130.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2026년 22.9만명(합계출산율 0.68명) 수준에서 2030년 26.3만명(합계출산율 0.8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0~5세 영유아 수는 2026년 143.5만명에서 2030년 139.9만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2026년 1,112.5만명에서 2030년 1,298.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증가세로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도 2026년 21.6%에서 2030년 25.3%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인구 수(만명)	5,160.9	5,153.5	5,146.0	5,138.4	5,130.6
(총 인구 증가율, %)	(△0.1)	(△0.1)	(△0.1)	(△0.1)	(△0.2)
출생아 수(만명)	22.9	23.9	24.8	25.7	26.3
합계출산율(명)	0.68	0.71	0.75	0.78	0.82
0~5세 인구 수(만명)	143.5	139.0	136.9	137.2	139.9
(0~5세 인구 비중, %)	(2.8)	(2.7)	(2.7)	(2.7)	(2.7)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1,112.5	1,159.7	1,212.5	1,252.1	1,298.0
(65세 이상 인구 비중, %)	(21.6)	(22.5)	(23.6)	(24.4)	(25.3)
사망자 수(만명)	36.9	37.9	39.0	40.0	41.1

자료: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다만, 일부 인구변수의 경우 최근 실적 또는 NABO의 자체 인구전망(「NABO 인구전망 2025~2045」, 2025.12.11.)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전망항목에 대한 서술 참조.

나. 거시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최근 중기 경제전망(「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 9.) 보고서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사용한다. 전망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실질GDP 및 명목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취업자 수 증감률, 금리,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 등이다.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26~'30 평균
명목GDP 성장률	22.0	7.3	5.0	4.8	4.6	8.7
실질GDP 성장률	3.5	2.7	2.5	2.5	2.4	2.7
디플레이터	17.8	4.4	2.5	2.3	2.2	5.8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4	2.2	2.0	2.0	2.3
명목임금상승률	3.2	6.5	4.7	3.3	3.2	4.2
취업자 수 증감률	0.5	0.6	0.3	0.3	0.2	0.4
실업률	2.8	2.9	2.9	2.9	3.0	2.9
국고채금리(3년)	3.6	3.5	3.2	2.9	2.8	3.2
회사채금리(3년, AA-)	4.3	4.0	3.7	3.3	3.2	3.8

주: 평균은 기간 중 단순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실질GDP는 2026년은 3.5%, 2027년은 2.7% 성장할 전망이다. 2027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의 기여도[4]는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026년 0.4%p, 2027년 0.5%p로 2025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27년 총지출 규모가 2026년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하여 예년의 평균 증가율 5.4%(2010~2025년 평

4) 순수출(총수출-총수입) 기준 성장기여도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과소 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에서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효과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하였다.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계산에는 산업연관표(2023년 연장표 기준)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중 수출의 수입유발액 비중(38.7%)을 활용하였다.

균)보다 크게 높으나,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5)]

이러한 전망에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AI 투자 감속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반도체 포함 수출 주력시장에서 중국의 추격과 저가공세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다. 또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대로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투명하며, 반도체 수혜 업종 및 부문과 그렇지 아니한 업종 및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26~2030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7% 성장할 예상으로 이전 5년(2021~2025년)의 2.5%에 비해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투자 기여도는 0.8%p로 이전 기간의 0.1%p에 비해 대폭 높아질 예상이다.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향후 5년 0.5%p로 이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이전 5년의 4.1%(국회확정예산 기준)에 비해 두 배 이상이지만 국민소득통계 상 정부 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 확대 속도가 민간투자와 수출의 증가율을 밑돌면서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실질GDP의 예상 성장경로는 한동안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추세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이후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7년 7.3%로 2026년 22.0%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2027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예상이며(3.5% → 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26년에 비해서는 개선 폭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17.8% → 4.4%). 이는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상황 개선, 세계적인 수요감소 등을 반영하여 하향 안정되면서 내수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2.0%로 2027년 물가상승률과

5) 국회예산정책처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2027년 정부 예산안 상세자료에 국민소득통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춘 IMF의 '01 재정통계편람(GFS)을 적용하여 국민계정 기준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항목의 2027년 예산상 증감률을 자체 추산한 결과,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2026년 국회확정예산(추경포함) 대비 각각 5.5%, 7.6% 증가하여 예년 평균(2010~2025년) 4.2%와 6.2%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외 지출항목에서는 이전지출이 2027년 12.8% 증가하여 예년(6.0%) 대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이 있다. 다만 이전지출은 국민계정 상 정부의 최종지출(소비 및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정부의 재원이 민간 등으로 이전되어 지출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2026~2030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3% 상승할 전망이다. 2026년 중 물가 상승을 주도한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2029년에 이르러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민간소비 등 실질GDP의 지출 항목별 성장률 전망과 최근 고용동향, 정부 정책 등 외생적 요인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 취업자 수는 민간소비 개선세 지속, 건설투자 반등,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18만명(0.6%)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 기간 중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11.1만명으로 예상된다. 2026~2028년 중에는 10만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겠으나, 2029년부터는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6년 실업률은 2025년에 이어 2.8%를 기록하겠으며 2027~2029년 중에는 2.9%, 2030년에는 3.0%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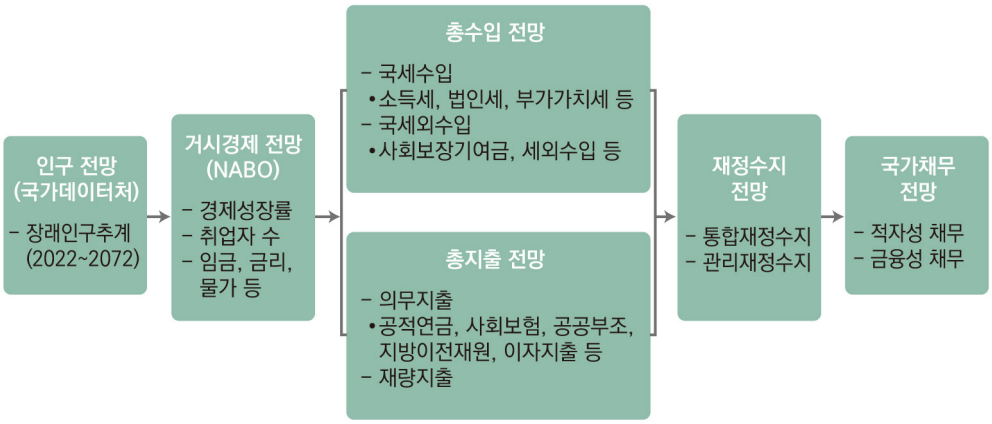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에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변화, 일자리 구성 변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였다. 2027년 명목임금상승률은 6.5%로 전망되며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상승률은 4.2%로 전망된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대규모 특별급여 지급의 영향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되고 경제성장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최근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글로벌 중장기 금리와의 동조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7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고, 8월 27일 연속 인상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 또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7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올해보다 0.1%p 하락한 3.5%로 예측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한국은행 목표 수준인 2%에 수렴함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2030년 2.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또한 국고채금리 추세에 따라 2027년 4.0%로 올해 대비 0.3%p 하락하고, 2030년 3.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전망 방법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를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의 각 항목을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이때 인구변수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에 근거하나, 거시경제변수와 항목별 전망모형은 NABO에 근거하므로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있다.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국세외수입은 다시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분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국세외수입은 주요 수입관별(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등)로 시계열 회귀분석과 연기금별 전망모형 등을 통해 전망한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며, 의무지출은 분야별·세부사업별로 법령의 지출요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총량 수준에서 전망한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하며, 복지 분야는 다시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복지지출로 구분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

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지를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라. 주요 정책 변화

NABO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수입의 경우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2026.9.3.)에 종합부동산세 거주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및 세율인상 등 개편 등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와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 도입 등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세수 증가효과가 감소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세법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어 시행된다.[6)]

6)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표 3]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등 ○ (법인세)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제외 등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등 ○ (기타 세목) 종합부동산세 개편,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

의무지출의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제외하는 등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명목GDP 및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방이전재원을 제외한 의무지출 중 정책 변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지출은 기초연금(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및 단가 인상, 부부감액 비율 하향 조정 등), 아동수당(단가 인상 및 우대 확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국고지원율 인상)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상대적으로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안에는 의무지출의 수급요건 또는 단가와 관련된 법령 등의 향후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재량지출의 경우는 현행 수준(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 가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계획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55.5조원에서 2030년 467.3조원으로 계획되었는데, 2026~2030년 동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2026년 본예산 대비 연평균 8.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재량지출의 확대는 총지출 수준을 증가시킨다.

[표 4]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table>
<tr><th></th><th>주요 정책 변화</th></tr>
<tr><td>의무지출</td><td>○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명목GDP 및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기초연금)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27.4.~) 등
○ (아동수당) 기존의 아동수당을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
○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율 확대(2026년 11.9% → 2027년 12.3%)</td></tr>
<tr><td>재량지출</td><td>○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2030년 동안 2026년 본예산 대비 연평균 8.3% 증가(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
(단위: 조원)
<table><tr><th>2025
결산</th><th>2026
본예산</th><th>2026
추경</th><th>2027
예산안</th><th>2028
계획</th><th>2029
계획</th><th>2030
계획</th></tr><tr><td>315.7</td><td>340.2</td><td>355.5</td><td>394.1</td><td>422.8</td><td>445.5</td><td>467.3</td></tr></table></td></tr>
</table>

Ⅱ. 중기재정전망 결과

1. 개 관

2027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부 세법개정안,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개편 및 재량지출 확대 등을 반영한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784.0	890.2	933.6	971.9	1,012.1	6.6
(전년 대비 증가율)	(23.0)	(13.5)	(4.9)	(4.1)	(4.1)	
국세수입	480.5	593.7	621.9	647.7	673.3	8.8
(전년 대비 증가율)	(28.5)	(23.5)	(4.8)	(4.2)	(4.0)	
국세외수입	303.5	296.5	311.7	324.2	338.7	2.8
(전년 대비 증가율)	(15.2)	(△2.3)	(5.1)	(4.0)	(4.5)	
총지출	756.5	827.2	909.1	982.4	1,035.8	8.2
(전년 대비 증가율)	(10.6)	(9.4)	(9.9)	(8.1)	(5.4)	
의무지출	400.9	433.1	486.3	536.9	568.5	9.1
(전년 대비 증가율)	(8.9)	(8.0)	(12.3)	(10.4)	(5.9)	
재량지출	355.5	394.1	422.8	445.5	467.3	7.1
(전년 대비 증가율)	(12.6)	(10.9)	(7.3)	(5.4)	(4.9)	
통합재정수지	27.5	62.9	24.5	△10.5	△23.7	
(GDP 대비 비율)	(0.8)	(1.8)	(0.7)	(△0.3)	(△0.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72.1	58.6	66.3	67.8	68.3	
(GDP 대비 비율)	(2.2)	(1.7)	(1.8)	(1.8)	(1.7)	
관리재정수지	△44.6	4.3	△41.8	△78.3	△92.1	
(GDP 대비 비율)	(△1.4)	(0.1)	(△1.1)	(△2.0)	(△2.3)	
국가채무	1,413.7	1,512.4	1,586.7	1,642.2	1,711.4	4.9
(전년 대비 증가율)	(8.3)	(7.0)	(4.9)	(3.5)	(4.2)	
(GDP 대비 비율)	(43.3)	(43.2)	(43.2)	(42.6)	(4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에서 2030년 1,012.1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국세수입의 경우,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국세수입은 480.5조원으로, 반도체 기업 등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내수회복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증가하여 2025년(373.9조원) 대비 106.6조원(2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반도체 업종의 경기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세도 확대되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2026년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여건의 개선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에서 2030년 1,035.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9.1%)과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연평균 7.1%)에서 기인한다.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제도의 성숙 및 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6년 94.9조원에서 2030년 129.6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제도 개편 및 국세수입·명목GDP의 높은 증가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6년 154.4조원에서 2030년 234.7조원으로 연평균 1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아동수당(22.2%), 국민기초생활보장(13.0%), 기초연금(10.8%) 등의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8.3%(2026년 본예산 대비)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전반적으로 총지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초반에는 국세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27.5조원 흑자, 2027년에는 62.9조원 흑자, 2028년에는 24.5조원 흑자로 예상된다. 다만, 2029년부터는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통합재정수지는 10.5조원 적자, 2030년에는 23.7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58.6~72.1조원)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적자로 예상되는데,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대로 하락함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6년 44.6조원에서 2030년 92.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113.2조원)으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흑자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보임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6년 1,413.7조원에서 2030년 1,711.4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43.3%에서 2030년 42.5%로 소폭 하락(△0.8%p)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망기간 동안 국가채무 증가율이 NABO 경제전망에 따른 명목GDP의 연평균 증가율(5.4%, 단순평균은 8.7%)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양(+)의 세수효과로 인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10.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이전재원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132.5조원 감소하나 재량지출은 291.4조원 증가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58.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중기재정전망: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현행 수준 대비)

(단위: 조원, %p)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총수입	—	0.7	2.6	3.4	3.6	10.4
국세수입	—	0.7	2.6	3.4	3.6	10.4
국세외수입	—	0.0	0.0	0.0	0.0	0.0
총지출	—	△16.7	28.0	65.8	81.8	158.9
의무지출	—	△62.3	△38.7	△16.5	△15.0	△132.5
재량지출	—	45.7	66.6	82.3	96.8	291.4
통합재정수지	—	17.4	△25.3	△62.3	△78.2	△148.4
(GDP 대비 비율)	—	(0.5)	(△0.7)	(△1.6)	(△1.9)	
관리재정수지	—	17.4	△25.3	△62.3	△78.1	△148.5
(GDP 대비 비율)	—	(0.5)	(△0.7)	(△1.6)	(△1.9)	
국가채무	—	△17.4	8.0	47.8	99.3	
(GDP 대비 비율)	—	(△0.5)	(0.2)	(1.2)	(2.5)	

주: 표 안의 수치는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총수입 중 국세수입의 경우,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2030년간 10.4조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개정사항 중 종합부동산세 거주여부에 따른 주택분 기본공제 차등적용 및 세율 인상 등 개편(2027~2030년간 총 9.3조원 추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및 종료(2.6조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1.0조원) 등에 따라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3.7조원), R&D 및 투자 세제지원에 대한 지방우대계수 도입(△1.0조원) 등은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되어 전체적인 세수 증가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 관련 주요 정책 변화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2.5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38.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추가세수[7])이 제외되는 정책 변화 때문이다. 전망기간 중 지방교부

7) 추가세수란, 내국세 세입 예산 중 과거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추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세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과 2028년에 제도 개편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9년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양(+)의 세수효과로 내국세 세입이 증가하여 제도 개편 이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명목GDP 및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3.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8] 그밖에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등의 정책 변화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7년에서 2030년까지 현행 수준 대비 17.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의 경우 현행 수준 대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량지출 계획을 정책변화로 가정할 경우 이번 예산안 등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91.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재량지출의 현행 수준은 2026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355.5조원으로 보나, 2027년부터는 2026년 본예산(340.2조원)을 베이스로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수준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5.7조원, 2028년 66.6조원, 2029년 82.3조원, 2030년 96.8조원으로 전망한다.

현행 수준과 비교할 때 중기재정전망의 재정수지는 총수입 증가(2027~2030년 10.4조원)에 비해 총지출 증가(158.9조원)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현행 수준에 비해 중기재정전망에서 2028년 이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3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42.5%로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2.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전망 및 서술 참조.

8) 다만,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 제출일자: 2026.9.3.)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조제1항제1호).

2.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각 세목별로 세입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지표의 전망치와 전망모형,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GDP 대비 14.7%)에서 2030년 673.3조원(16.7%)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 기간 명목GDP 성장률(연평균 5.4%)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6조원(2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AI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반도체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전년 대비 53.7조원 증가)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성과급 상승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21.6조원), 내수회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9.1조원) 등도 국세수입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2026년(480.5조원)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종의 경기호조 지속 등으로 법인세가 높은 증가세(전년 대비 83.8조원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회복세 확대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으로 소득세(29.6조원), 부가가치세(5.0조원) 등 주요 세목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여건의 개선에 따라 2028년 621.9조원(2027년 대비 4.8% 증가), 2029년 647.7조원(4.2%), 2030년 673.3조원(4.0%) 등 연간 4%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간 중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법인세가 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인세는 반도체 업종 등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실적 개선세에 따라 전망기간 중 연평균 16.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상승 등 임금증가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도 내수회복에 따른 소비여건의 개선으로 연평균 4.9%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세목 중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세목 의 경우, 내수회복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물품 소비의 증가와 함께 유류세 인하조치의 환원 등 제도적 요인에 따라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

래세 등 기타 자산세수는 2027년 상속세 연부연납분 감소,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이후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480.5	593.7	621.9	647.7	673.3	8.8
(GDP 대비 비율)	(14.7)	(16.9)	(16.9)	(16.8)	(16.7)	
소득세	152.1	181.7	188.9	195.9	203.0	7.5
법인세	138.3	222.1	232.3	242.8	253.4	16.3
부가가치세	88.2	93.3	97.9	102.4	107.0	4.9
기타	101.9	96.7	102.8	106.6	109.9	1.9
기타 소비세수	38.1	39.9	41.9	42.5	43.0	3.1
기타 자산세수	63.8	56.7	60.9	64.1	66.9	1.2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 세목의 합계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소득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 세부세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취업자수, 사업소득 신고율 등을,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수,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전망한다.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은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 등으로 구성된 전망모형을 이용하였다. 각 세부세목별 전망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망치에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 등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연도별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전망 결과, 소득세는 2026년 152.1조원에서 2030년 203.0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중 소득세는 주요 세부세목인 근로소득세

가 임금근로자 증가 및 임금상승 등 고용지표의 개선에 따라 연평균 10.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득세 전반의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업종 등 기업 영업실적의 개선으로 기업의 배당지급이 확대되면서 배당소득세도 연평균 14.9%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내수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연평균 6.0%의 증가가 전망된다.

[표 8] 중기재정전망: 소득세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소득세	152.1	181.7	188.9	195.9	203.0	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소득세 중기재정전망은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 항목의 세수효과에 따라 3.5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유형별로 현행 2,200~4,400만원인 지급기준을 2,600~5,200만원으로 유형별로 400~800만원 인상하고, 구간별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는 대중교통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지출로 직접지원하면서 현행 40%의 우대공제율을 폐지하고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체계로 편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표 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세수 감소) -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으로 지급대상 확대 ※ 총소득기준금액(만원): (단독가구) 2,200 → 2,600, (홑벌이가구) 3,200 → 3,700, (맞벌이가구) 4,400 → 5,200 - 가구유형별로 규정된 총급여 등 구간별 지급액 인상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우대공제 폐지 등(세수 증가) -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공제율을 폐지하고,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15~30% 적용 ※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 40% →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표 10]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소득세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수효과	—	△1.2	△0.8	△0.8	△0.8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법인세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각각을 전망한다.

법인세 신고분은 2026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의 영업이익 등 실적과 8월까지의 누적 법인세 실적을 고려하여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6년의 법인세 신고분의 세수를 전망한다. 다음으로 명목GDP, 설비투자, 통관수출 및 환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망모형을 통해 2030년까지의 세수를 전망한다. 법인세 원천분은 명목GDP, 설비투자 및 환율 등을 바탕으로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등을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원천분의 세수를 전망한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된 법인세 신고분 및 원천분 세수를 합산한 후,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제외 등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법인세는 2026년 138.3조원에서 2030년 253.4조원으로 연평균 16.3% 증가

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중 법인세의 증가는 주로 법인세 신고분 증가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신고분은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2027년 전년 대비 74.3% 증가한 후, 2028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세와 기업실적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연평균 4.7%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 원천분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와 배당금 확대 등에 힘입어 2027년 세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할 전망이다. 2028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세 완화와 함께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리 수준이 안정화됨에 따라 2.8%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표 11] 중기재정전망: 법인세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법인세	138.3	222.1	232.3	242.8	253.4	1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법인세 중기재정전망은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제외 등 항목의 세수효과에 따라 1.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 도입은 현행 기업규모별, 기술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용되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지역, 투자지역에 따라 공제율에 1.0~1.5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공제혜택은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기업규모별로 900~1,300만원 세액공제하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에 대해 적용기한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12]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 도입(세수 감소)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지역, 투자지역에 따라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하여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세제지원 ※ 지방우대계수: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등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1.5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제외 등(세수 증가) - 현행 기업규모별 · 근로자유형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대기업에 한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액(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만원): 고용연차별 300~500 → 없음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종료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액(1인당, 만원): 중견기업 900, 중소기업 1,300 → 없음

[표 13]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법인세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수효과	—	△0.0	△0.4	△0.4	△0.4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명목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하며,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망치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부가가치세는 2026년 88.2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의 증가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표 14] 중기재정전망: 부가가치세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세	88.2	93.3	97.9	102.4	107.0	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부가가치세 중기재정전망은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등 항목의 세수효과에 따라 3.0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말까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한시적 우대공제를 2029년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1.3%에서 1.2%로, 공제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종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표 15] 주요 정책 변화: 부가가치세

	주요 정책 변화
부가가치세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세수 증가)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한시적 우대공제 축소, 적용기한 연장 ※ 우대공제: (공제율) 1.3% → 1.2%, (연간 공제한도) 1,000만원 → 500만원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세수 증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26년말 적용 종료

[표 16]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수효과	—	0.6	0.8	0.8	0.8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기타 세목

기타 세목의 세수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세목별 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또한,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부가세(surtax, 附加稅)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명목GDP 성장률 및 탄력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치에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거주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및 세율인상 등 개편과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등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기타 세목은 2026년 101.9조원에서 2030년 109.9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타 소비세수는 2026년 38.1조원에서 2030년 43.0조원으로, 내수회복에 따른 과세대상 물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등 제도적 요인에 따라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자산세수는 2026년 63.8조원에서 2030년 66.9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산세수는 2026년 63.8조원에서 상속세 연부연납분 감소, 증권거래대금 감소 전망 등으로 2027년 56.7조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2028년부터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다.

[표 17] 중기재정전망: 기타 세목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기타 세목	101.9	96.7	102.8	106.6	109.9	1.9
기타 소비세수	38.1	39.9	41.9	42.5	43.0	3.1
기타 자산세수	63.8	56.7	60.9	64.1	66.9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기타 세목 중기재정전망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거주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및 세율 인상 등 개편, 전기자동차 등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등 항목의 세수효과에 따라 12.2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기본공제를 거주기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기간별 세액공제를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도를 신설한다.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및 종료는 현행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의 한도를 현행 대당 300 · 4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28년말에 적용 종료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대당 7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2026년말에 적용 종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표 18]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세수 증가) - 납세의무자 기준: 모든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1세대 1주택자 합산공시가격 14억원 이상, 그 외 9억원 이상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1인당) 9억원 → 거주 9억원, 비거주 6억원 그 외 개인 9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4~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7년) 70 →('28년 이후) 3주택 이상 80, 그 외 70 - 세율(%): 2주택 이하 0.5~2.7 →('27년) 0.5~3.5 →('28년 이후) 0.5~5.0 * 3주택 이상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 - 세액공제: (공제율) 보유기간 별로 20~50% → 거주기간 별로 20~50% 적용 (공제한도 신설)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세수 증가) -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3% → 4% - 2028년 과세분부터 적용 ○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및 종료(세수 증가) - 1대당 감면한도(만원): (전기차) 현행 300 → '27년 200 → '28년 100 (수소전기차) 현행 400 → '27년 300 → '28년 150 - 적용기한: 2026.12.31. → 2028.12.31. ○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종료(세수 증가) - 1대당 감면한도(만원): 현행 70만원 → 종료 - 적용기한: 2026.12.31.

[표 19]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기타 세목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수효과	-	1.3	3.1	3.8	4.0	1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주요 수입관별(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등)로 시계열 회귀분석과 연기금별 전망모형 등을 통해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국세외수입은 2026년 303.5조원(GDP 대비 9.3%)에서 2030년 338.7조원(GDP 대비 8.4%)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전망이다. 연기금의 가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및 연금수입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303.5	296.5	311.7	324.2	338.7	2.8
(GDP 대비 비율)	(9.3)	(8.5)	(8.5)	(8.4)	(8.4)	
세외수입	40.0	39.3	37.4	35.4	35.6	△2.8
기금수입	263.5	257.1	274.3	288.8	303.1	3.6
사회보장기여금	104.4	111.1	118.7	125.9	133.4	6.3
연금수입	21.6	22.0	23.5	25.1	26.1	4.8
기타	137.5	124.1	132.2	137.8	143.6	1.1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세외수입을 의미하며, 경상이전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등 다양한 수입으로 구성된다.

주요 수입관별(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등)로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하며, 한국은행잉여금 등 일부 수입은 등락이 심하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별도로 전망한다.[9] 전망 결과, 세외수입은 2026년 40.0조원에서 2030년 35.6조원으로 연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중 세외수입은 회계·기금 간 이관, 2028년 이후 한국은행잉여금 수입 축소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잉여금 수입의 경우 2025~2026년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증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실적 호조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8년부터 점차 평년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중기재정전망: 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세외수입	40.0	39.3	37.4	35.4	35.6	△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금수입

(가)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기여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기여금은 유형별(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성별·연령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하는데,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9.5%이며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될 예정이다.

전망 결과, 국민연금기여금은 2026년 68.5조원에서 2030년 92.0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활동인구 및 명목

9) 일반회계 재산수입 중 한국은행잉여금의 경우, 2023년 1.8조원, 2024년 0.9조원, 2025년 5.4조원이 수납되어 등락이 큰 편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2026년 예산에 7.3조원을 편성하였는데 2026년 수납된 한국은행잉여금은 10.7조원(2025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약 69% 수준)으로 3.4조원 과수납되었다.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수 및 가입자 임금의 변동을 추정하고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반영한 결과이다.

[표 22]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기여금	68.5	74.2	80.1	85.9	92.0	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학연금

사학연금기금 사회보장기여금(사학연금기여금)은 가입자와 학교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연금부담금(교원은 5.294%, 직원은 9%), 재해보상부담금(개인 연금부담금의 4.54%), 퇴직수당부담금(대학 소속 가입자 퇴직수당 소요액의 40%)으로 구성되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연금부담금 중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율 9%)이다.[10] 기여금은 직종별·성별·재직기간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과 개인 및 학교법인의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사학연금기여금은 2026년 4.0조원에서 2030년 4.7조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가입자 수 및 가입자 임금 추이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표 23]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사학연금기여금	4.0	4.1	4.3	4.5	4.7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여기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정부내부수입이므로 제외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고용보험기여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기여금은 유형별(근로자·자영업자), 계정별(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전망한다. 임금근로자의 보수총액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과 NABO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기여금 증가율 등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고용보험기여금은 2026년 21.7조원에서 2030년 24.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고용보험기여금	21.7	22.0	23.1	24.0	24.8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재보험

산재보험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산재보험기여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산재보험의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평균 1.41%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5‰(천분율),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등이며,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0.6‰)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재보험기여금은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추정보수총액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과 NABO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료율은 추정보수총액 대비 기여금 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산한다. 전망 결과, 산재보험기여금은 2026년 10.3조원에서 2030년 11.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기여금	10.3	10.7	11.1	11.5	11.9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연금수입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연금기여금(가입자 부담), 지자체연금부담금(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급여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고, 연도별 가입자 수 전망치, 직종별·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9%)을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2026년 20.9조원에서 2030년 25.2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입자 수의 증가 및 공무원 보수상승률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증가에 기인한다.

[표 26]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 연금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공무원연금 연금수입	20.9	21.2	22.7	24.3	25.2	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수입은 연금기여금(가입자 부담)을 말하며, 연도별 가입자 수 전망치, 계급별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7%)을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군인연금의 연금수입은 2026년 0.76조원에서 2030년 0.85조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입자 수의 증가 및 공무원 보수상승률에 따른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증가에 기인한다.

[표 27]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 연금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군인연금 연금수입	0.76	0.77	0.80	0.82	0.85	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기타 기금수입

기타 기금수입은 기금수입 중 사회보장성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연기금의 재산수입 등은 연기금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나머지 수입은 주요 수입관별(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로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한다. 전망 결과, 기타 기금수입은 2026년 137.5조원에서 2030년 143.6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중 기타 기금수입은 공적자금상환기금[11]의 일몰 도래(2027년 말), 융자원금회수의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기금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기타 기금수입	137.5	124.1	132.2	137.8	143.6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총지출 전망

가.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급여별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등을 추정하여 전망하며,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규모는 2026년 당초 계획 4.8조원, 2027년도 계획안 기준 3.5조원이다.

수급요건과 지원단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 및 명목GDP 전망, 그리고 학령인구 변화 등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이자지출은 국고채 이자지출과 기타 이자지출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기타 의무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의무지출은 2026년 400.9조원(GDP 대비 12.3%)에서 2030년 568.5조원(GDP 대비 14.1%)으로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6년 199.9조원에서 2030년 273.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의무지출 분야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53.0%에서 2030년 54.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400.9	433.1	486.3	536.9	568.5	9.1
(GDP 대비 비율)	(12.3)	(12.4)	(13.2)	(13.9)	(14.1)	
(총지출 대비 비중)	(53.0)	(52.4)	(53.5)	(54.6)	(54.9)	
복지 분야	199.9	221.2	236.4	254.0	273.8	8.2
공적연금	94.9	102.9	110.4	119.2	129.6	8.1
사회보험	42.6	45.5	47.9	50.1	52.4	5.4
공공부조	47.0	56.6	62.2	67.6	73.7	11.9
기타	15.4	16.3	15.9	17.0	18.0	4.0
지방이전재원	154.4	160.0	194.3	224.9	234.7	11.0
이자지출	33.8	38.1	41.1	43.2	44.7	7.2
기타 의무지출	12.9	13.9	14.5	14.8	15.3	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복지 분야 의무지출

(가) 공적연금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지출로, 연금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일시금급여로 구성된다. 급여유형별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급여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평균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55.8조원에서 2030년 81.9조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가입자와 가입이력자, 가입예정자의 가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표 30]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의무지출	55.8	61.5	66.7	73.5	81.9	1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학연금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연금급여는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유족연금 등이고, 재해보상급여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직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며, 퇴직수당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세 사업 모두 급여 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평균 지급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6.1조원에서 2030년 7.4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지급단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표 31]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사학연금 의무지출	6.1	6.4	6.7	7.1	7.4	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의무지출은 퇴직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로 구성된다. 퇴직급여는 수급자를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 추계와 평균 급여액을 곱하여 전망하고, 퇴직수당은 연도별 퇴직자 수를 추계한 후 평균 퇴직수당을 곱하여 산출하며 재해보상급여는 퇴직급여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공무원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28.3조원에서 2030년 34.5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급여의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퇴직연금 등 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결과로 보인다.

[표 32]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공무원연금 의무지출	28.3	29.9	31.8	33.1	34.5	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퇴직급여(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로 구성된다. 퇴직급여는 수급자를 기수급자와 계급별 전역인원에 기초한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 추계와 평균 급여액을 곱하여 전망하고, 퇴직수당은 계급별 전역인원에 계급별 평균 퇴직수당을 곱하여 산출하며 재해보상급여는 퇴직급여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4.8조원에서 2030년 5.7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역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퇴역연금 등 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결과로 보인다.

[표 33]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군인연금 의무지출	4.8	5.0	5.3	5.5	5.7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회보험

사회보험 의무지출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지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및 공무원·교원에 대한 국가의 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보험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구분되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유·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로 구분된다.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전망하며, 이 중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의 실업자 수 전망치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출생아 수 전망치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전망 결과,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17.4조원에서 2030년 20.6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모성보호급여 관련 재정소요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집행 추이를 반영한 결과이며, 2027년 이후 재정소요는 정책 변화에 따른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전망기간 동안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7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고용보험 의무지출	17.4	18.2	19.0	19.8	20.6	4.3
						합계
추가재정소요	—	0.001	0.002	0.002	0.002	0.0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5] 주요 정책 변화: 고용보험 의무지출

	주요 정책 변화
고용보험 의무지출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원 - 무급기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산재보험 급여지출로 이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로 구성된다. 산재보험급여 재정전망은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전망하는데, 신규 수급자 수는 산재보험 급여의 유형에 따라 재해율, 사망만인율, 신규 수급자 수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며,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국가데이터처의 일반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급여단가는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추산한다.

전망 결과,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8.8조원에서 2030년 10.3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산재보험 의무지출에 대한 재정소요는 최근 사업대상자 수의 추이와 지원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2027년 이후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수준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71억원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7년 정부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한 선보장 제도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반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예방중심 구조 전환 등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지출이 감소한다는 계획을 토대로 계획안을 편성하였다. 이 중 선보장 제도는 산재보험 급여의 우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며,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예방중심 구조 전환은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험급여 심사 및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개선 등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의 지출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 의무지출	8.8	9.2	9.6	10.0	10.3	4.1
						합계
추가재정소요	—	△0.036	0.007	0.007	0.006	△0.0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7] 주요 정책 변화: 산재보험 의무지출

	주요 정책 변화
산재보험 의무지출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예방중심 구조 전환 등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공무원·교원의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된다.[12] 건강보험 의무지출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국고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망 결과,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13.8조원에서 2030년 18.1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 증가에 기인

12)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하는데, 예상 수입액은 향후 가입자 및 보수월액 증가와 보험료율 인상 가정에 따라 증가한다.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부담금도 예상 수입액 전망모형 내에서 추정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NABO가 전망한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증가율을 준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지원율을 현행 11.9%에서 12.3%로 상향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였으므로, 국고지원율을 유지하는 현행 수준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94조원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 중기재정전망: 건강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건강보험 의무지출	13.8	15.3	16.2	17.1	18.1	7.0
						합계
추가재정소요	—	0.44	0.47	0.50	0.53	1.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9] 주요 정책 변화: 건강보험 의무지출

	주요 정책 변화
건강보험 의무지출	○ 2027년 일반회계 국고지원율 인상 - (현행) 예산 상 국고지원율 11.9% → (정책 변화) 예산 상 국고지원율 12.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국가지원금과 공무원·교직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사업관리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지원금은 그 해의 예상 보험료 수입액에 국고지원율을 곱하여 전망하고, 공무원·교직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은 각 대상자 수에 평균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2.6조원에서 2030년 3.5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 국고지원율 인하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2027년 예산

안의 국고지원율은 2026년 예산에 적용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서 18.9% 수준으로 낮추어 편성하였다. 2026년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2027년 이후 18.9%를 적용하는 경우를 정책변화로 가정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0.7조원 적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0] 중기재정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2.6	2.8	3.0	3.2	3.5	7.7
						합계
추가재정소요	—	△0.2	△0.2	△0.2	△0.2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1] 주요 정책 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주요 정책 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 2027년 일반회계 국고지원율 인하 -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정책 변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8.9%

(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의무지출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이 기준과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출 전망은 가구원수별 수급가구 수와 시설급여 수급자 수에 각각의 지급단가를 곱하여 합산한

다. 전망 결과, 생계급여의 국고 지급액은 2026년 9.9조원에서 2030년 17.2조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증가로 수급 가구 수가 함께 증가하며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가구의 평균 수급액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2027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에도 기인한다.

[표 42] 중기재정전망: 생계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생계급여	9.9	11.4	13.1	15.0	17.2	14.9
						합계
추가재정소요	—	0.03	0.04	0.05	0.05	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생계급여는 2027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정책 변화가 계획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 생계급여는 매년 약 347~52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 주요 정책 변화: 생계급여

	주요 정책 변화
생계급여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7.7.~)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부양의무자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행려병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게 제공한다. 의료급여 전망 항목은 종별(1종, 2종 및 타법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기본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진료비는 종별 수급자 수에 진료비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의료급여는 2026년 10.4조원에서 2030년 16.2조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진료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영향과, 2027년 이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13] 신설, 일반식 식대 인상 등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표 44] 중기재정전망: 의료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의료급여	10.4	12.4	13.2	14.6	16.2	11.7
						합계
추가재정소요	—	0.2	0.4	0.4	0.4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급여의 2027년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0.2조원, 2030년에 0.4조원 등 전망기간 동안 1.3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주요 정책 변화: 의료급여

	주요 정책 변화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7년 하반기 시행)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연 소득 1.3억원 초과)·고재산(재산 12억원 초과) 기준 폐지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2027년 하반기 시행) -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행 및 단계적 확대 ○ 일반식 식대 인상 - (현행) 4,230원 → (정책 변화) 현행 대비 14% 인상* * 2027년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

1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의 경우 2026년 신설 예정되었으나 간병비 급여화 지연으로 2027년에 최초 시행될 예정이다.

급여와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2027년 주거급여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법적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거급여의 지출규모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하여 추정한다. 임차급여는 수급가구 수에 평균 지급액을 곱하여 추정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유형별 수선비용과 연도별 사업물량을 고려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주거급여는 2026년 3.5조원에서 2030년 5.5조원으로 연평균 1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 주거급여 수급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대한 가정은 변동이 없으나, 기준중위소득[14] 및 기준임대료 인상[15]에 따른 수급대상 확대와 지급단가 상승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는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16]

[표 46] 중기재정전망: 주거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주거급여	3.5	3.9	4.4	4.9	5.5	1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교육급여의 지출 규모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상 학령인구(6~17세)에 급여항목별·학교급별 수급자 비율[17]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14)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되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4인 가구 기준 2026년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상향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7.28.)

15) 2027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2만원~5.0만원 인상되었으며, 2026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원(4.7%) ~ 3.9만원(11.0%)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7.28.)

16) 2027년도 주거급여 예산안에는 청년분리 급여지급 사업(2026년 241억원, 2027년 150억원)이 미래대응기금 사업(「청년월세 지원」)으로 이관되어 있어 2028년 이후에도 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17) 장래인구추계상 학령인구 대비 연도별 급여항목별·학교급별 수급자 실적치로 산출하였다.

전망 결과, 교육급여는 2026년 0.17조원에서 2030년 0.20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상승 등에 따른 수급율 증가 추세와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상승 등을 전망에 반영한 결과이다.

[표 47] 중기재정전망: 교육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교육급여	0.17	0.19	0.19	0.19	0.20	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출 전망은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지출은 2026년 21.8조원에서 2030년 32.9조원으로 연평균 1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상 65세 인구의 증가 추이와 2027년부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차등 급여 지급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48] 중기재정전망: 기초연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기초연금	21.8	27.2	29.6	31.2	32.9	10.8
						합계
추가재정소요	—	3.4	4.2	4.4	4.6	1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저소득 구간에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부부감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 기초연금은 매년 약 3.4~4.6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9] 주요 정책 변화: 기초연금

	주요 정책 변화
기초연금	○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27.4.~) - (대상자 유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 - (현행) 정액급여 * 물가연동으로 결정 - (개편) 2027년 기준 노인의 소득 하위 30% 이하는 38만원, 소득하위 30% 초과45% 이하는 전년도 단가에 물가연동하여 인상, 소득하위 45% 초과 70% 이하는 35만원 지급 ○ 부부감액 비율 하향 조정 ('27.4.~) - (현행) 20% 감액 → (개편) 소득하위 45% 이하는 10% 감액

장애수당(기초)

현재 장애수당(기초)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중 일부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출액은 연령별·급여유형별(재가수급·시설수급)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장애수당(기초) 사업의 국비 지출은 2026년 0.2조원에서 2030년 0.1조원으로 연평균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의 변화 등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표 50] 중기재정전망: 장애수당(기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장애수당(기초)	0.2	0.2	0.1	0.1	0.1	△4.4
						합계
추가재정소요	—	△0.03	△0.07	△0.07	△0.07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수당(기초)의 대상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수급대상자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 유지 시 예상되는 지출 수준에 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0.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주요 정책 변화: 장애수당(기초)

	주요 정책 변화
장애수당 (기초)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2027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수당(기초) 대상에서 제외(`27.7.~)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지출액은 연령집단별·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장애인연금의 국비 지출액은 2026년 1.0조원에서 2030년 1.5조원으로 연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대비 장애발생률, 수급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의 최근 추이와 2027년부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52] 중기재정전망: 장애인연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장애인연금	1.0	1.2	1.5	1.5	1.5	12.3
						합계
추가재정소요	—	0.2	0.5	0.5	0.5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즉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1·2급과 3급일 경우에는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종전 기준으로 3급 단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7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 주요 정책 변화: 장애인연금

	주요 정책 변화
장애인연금	○ 2027년부터 대상자를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으로 확대('27.7.~) - 단, 기초급여 50%, 부가급여 75% 지급

(라) 기타 복지지출

기타 복지지출은 보훈,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18)]

보훈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보철구지원,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훈 분야 의무지출 사업비는 보훈급여금 종류별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 수 및 지급단가, 지급기간 등을 추정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2026년 5.8조원에서 2030년 6.7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훈대상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한다. 보훈 분야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2025년 결산 기준 보상금 지급액은 3.6조원으로 전체 보훈 분야 의무지출 5.6조원의 63.4%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인원은 최근 5년간 19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급단가는 연평균 5.2% 상승하였다. 그 결과 보상금 총 지급액은 2021년 3.0조원에서 2025년 3.6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였다. 최근 11년간 등록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연령별 진입자 수, 사망자 수, 이탈자 수를 활용하여 향후 전체 보훈대상자 수를 추정하고 2025년 결산실적을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 보상금 지급인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단가의 연평균 인상률을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 보상금 소요예산은 2026년 3.7조원에서 2030년 4.3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18) 보훈,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제외한 기타 복지지출은 대지급금 지급,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6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으로 하고 2027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하게 전망한다.

[표 54] 중기재정전망: 보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보훈	5.8	6.1	6.3	6.5	6.7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연도별 해당 연령대 아동에게 월 10~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6년 현재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기본수당의 지출액은 수급아동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아동수당은 2026년 2.6조원에서 2030년 5.9조원으로 연평균 2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는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표 55] 중기재정전망: 아동수당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아동수당	2.6	3.1	4.0	5.2	5.9	22.2
						합계
추가재정소요	—	0.1	0.8	1.7	2.0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현재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령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나, 비수도권 지역에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는 1만원, 특별지역에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에는 1만원을 추가로 가산해주고 있다. 정부는 2027년 7월 출생아부터는 기본 월 2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0~1세 중 가정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가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6] 주요 정책 변화: 아동수당

	주요 정책 변화
아동수당	○ 기존의 아동수당을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 * 2027년 6월 출생아까지는 기존 아동수당 지원 유지 - (현행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기본 지급, 비수도권(+5천원)·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 +1만원, 특별지역 +2만원) 거주 아동에게 월 0.5~2만원 추가 지급 - (아동기본수당) 매월 20만원 기본 지급, 지방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월 30만원), 0~1세 아동 중 가정보육 이용 시 월 30만원 추가 지급 * 가정보육 가산금을 제외한 기본수당은 지급액의 50%를 현금으로, 나머지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1세에게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1세에게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 간의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19] 지출액은 연령별 아동을 전액 현금을 지원받는 아동과 차액을 지원받는 아동으로 나눈 후 각각의 지급단가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부모급여는 2026년 2.5조원에서 2029년 0.04조원으로 감소한 후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제도 폐지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표 57] 중기재정전망: 부모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부모급여	2.5	2.3	0.6	0.04	—	순감
						합계
추가재정소요	—	△0.3	△2.1	△2.7	△2.9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9) 어린이집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과 그렇지 않는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경우 부모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 단가를 상회하므로 별도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2027년 6월 출생아까지는 기존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027년 7월 출생아부터는 개편된 아동·보육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7년 6월 출생아가 1세가 되는 2029년까지 제도가 시행되며,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행제도 유지 시 예상되는 지출보다 총 8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8] 주요 정책 변화: 부모급여

	주요 정책 변화
부모급여	○ 2027년 6월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 - 아동기본수당 및 출산지원금으로 통합

(2) 지방이전재원

의무지출 성격의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현행 내국세 세입(내국세 8개 세목의 세수[20]에서 개별소비세 담배분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 및 특별교부세)과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세입에서 연동되는 부분의 산정방식을 내국세 세입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분을 제외한 부분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지방교부세 전망은 NABO의 내국세 세입 및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담배분 전망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지방교부세는 2026년 74.0조원에서 2030년 127.3조원으로 연평균 1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중 지방교부세는 제도변화에 따라 총 38.2조원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법

20)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8개 세목의 세수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른 증가효과(+7.8조원)와 미래대응기금 전출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범위 변경 등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감소효과(△46.1조원)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표 59] 중기재정전망: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부세	74.0	77.4	103.1	122.3	127.3	14.5
						합계
추가재정소요	—	△31.6	△11.8	2.5	2.7	△38.2
- 세법개정안	—	0.7	2.0	2.5	2.7	7.8
- 지방교부세 재원 범위 변경 등	—	△32.3	△13.8	—	—	△4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도변화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로 인해 2027~2030년간 총 7.8조원의 지방교부세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내국세 세입에서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하는 '추가세수'[21]를 별도로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전출분을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및 2028년 '추가세수' 추정액[22]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전출된다고 가정[23]하여 각각 32.3조원, 13.8조원의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1)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 제출일자: 2026.9.3.)을 살펴보면, 내국세 세입(개별소비세 담배분 제외)에서 추세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추세치는 2년 전 내국세 세입 실적에 최근 10년(t-12~t-2년)간 내국세 세입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2)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27년 167.8조원, 2028년 71.7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나,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2026.10.)

23) 정부의 202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른 추가세수의 규모는 158.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액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될 계획이다.

[표 60] 주요 정책 변화: 지방교부세

	주요 정책 변화
지방교부세	○ 2026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지방교부세 재원 관련) - 종합부동산세 거주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및 세율인상 등 개편,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세액공제 축소,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및 종료 등 ○ (재원범위) 내국세 등에 연동되는 보통 및 특별교부세 재원범위 변경 - 보통 및 특별교부세: 내국세 세입×19.24% → (내국세 세입 – 미래대응기금 전출분) × 19.24% ※ 내국세 세입: 내국세 8개 세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세수 – 개별소비세 담배분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및 소방안전교부세(개별소비세 담배분 × 45%)의 재원은 현행과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현행 내국세 세입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24]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내국세 등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향후 학령인구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25]으로 변경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망을 위해 필요한 향후 학령인구 증가율 전망은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2023.12.)를 바탕으로, 경상성장률은 NABO 전망에 근거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전망에 필요한 내국세 및 교육세 전망은 NABO 전망에 근거하였다.

전망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6년 76.4조원에서 2030년 103.7조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하에 기준전망과 재정전망을 비교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내국세와의 연동체계가 단절됨에 따라 2026~2030년간 총 113.4조원의 지출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6]

---

24) 이때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 참고).

25)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53, 제출일자 2026.9.3.)에는 2027년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금액(75.7조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여 78.9조원으로 산정된다.

[표 61] 중기재정전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4	78.9	87.8	99.1	103.7	7.9
						합계
추가재정소요	—	△34.5	△30.4	△24.1	△24.4	△11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2] 주요 정책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table>
<tr><th></th><th>주요 정책 변화</th></tr>
<tr><td>지방교육
재정교부금</td><td>○ (재원 산정방식) 현행 내국세, 교육세 등에 연동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내국세 세입 ×20.79% + (교육세 총액 - 교육세 금융보험업자분) ×40% → 전년도 교부금 × (1+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 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35%)]
※ 단, 2027년 예산안은 75.7조원에서 최근 3년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을 감안하여 78.9조원으로 산정
- 기존 교육세에서 연동되던 부분은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
<table><tr><th>현행</th><th>개편</th></tr><tr><td>○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td><td>○ 현행과 동일</td></tr><tr><td>○ 나머지 중 60%를 영유아특별회계에 배분</td><td>○ 현행과 동일</td></tr><tr><td>○ 그 외 나머지(4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td><td>○ 그 외 나머지(4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td></tr></table></td></tr>
</table>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27]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28]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영유아특별회계에 편성된

26)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 제출일자: 2026.9.3.)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조제1항제1호).

27)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8)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다. 해당 사업은 유치원 유아학비,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등으로 구성된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 지출 규모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상 3~5세 인구에 기관별(유치원·어린이집)·연령별 취원율[29]을 곱하여 대상 인원을 산출한 후 지원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 의무지출은 2026년 2.8조원에서 2030년 2.9조원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2027년 출생아 수가 증가하여 2028~2030년 3~5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표 63] 중기재정전망: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8	2.8	2.7	2.8	2.9	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27년부터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이다. 사업비는 장래인구추계상 3~5세 인구에 기관별(유치원·어린이집)·연령별 취원율[30]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인원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은 2026년 0.47조원에서 2030년 0.72조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7년 사업대상 확대와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 추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사업대상 확대가 지출 확대의 주요 요인이며, 2028년 이후는 출생 코호트별 인구 규모 및 기관별 취원율 변화 등의 영향에 기인한다.

29) 장래인구추계 대비 3~5세 취원 아동 수 실적치로 산출하였다.
30) 장래인구추계 대비 3~5세 취원 아동 수 실적치로 산출하였다.

[표 64] 중기재정전망: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0.47	0.68	0.67	0.69	0.72	1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의무지출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수에 단가와 국가부담 비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수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상 전망인구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비율[31]을 곱하여 추정한다. 다만, 동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고지원 사업의 재정소요는 2027년까지 전망한다.

전망 결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6년 0.58조원에서 2027년 0.31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부담 비율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로 축소되는 것에 기인한다. 2028년 이후에는 현행 국고지원 특례가 일몰되므로 해당 사업의 재정소요는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65] 중기재정전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0.58	0.31	—	—	—	순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과 기타 이자지출로 구성된다.

31) 장래인구추계상 고등학생 수 대비 연도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인원 실적치의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였다.

국고채 이자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기발행 국고채의 이자지출과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지출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신규 발행 국고채는 NABO 관리재정수지 전망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 등을 고려한다.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연도)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를 적용하는데, NABO 국고채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전망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2026년 28.9조원에서 2030년 39.6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총지출 규모가 확대되어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전반적으로 적자 상태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표 66] 중기재정전망: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고채 이자지출	28.9	32.7	35.7	37.9	39.6	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타 이자지출

기타 이자지출은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청약저축 이자지급,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의 경우 NABO의 우체국예금 수신고(평잔) 및 평균조달금리 전망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다른 이자지출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2026년 4.9조원에서 2030년 5.1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7] 중기재정전망: 기타 이자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기타 이자지출	4.9	5.4	5.3	5.2	5.1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의무지출로, 공익기능증진 직불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2026년 12.9조원에서 2030년 15.3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기타 의무지출	12.9	13.9	14.5	14.8	15.3	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의무지출과 달리 그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2026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으로 하고, 2027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재량지출은 2026년 355.5조원(GDP 대비 10.9%)에서 2030년 467.3조원(GDP 대비 11.6%)으로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수준(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과 비교할 때 연간 45.7~96.8조원 큰 규모이며, 이러한 지출 확대를 주요 정책 변화로 보고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다. 재량지출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의무지출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재량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데, 2026년 47.0%에서 2030년 45.1%로 전망된다.

[표 69]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355.5	394.1	422.8	445.5	467.3	7.1
(GDP 대비 비율)	(10.9)	(11.3)	(11.5)	(11.6)	(11.6)	
(총지출 대비 비중)	(47.0)	(47.6)	(46.5)	(45.3)	(45.1)	
						합계
추가재정소요	—	45.7	66.6	82.3	96.8	29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0] 주요 정책 변화: 재량지출

	주요 정책 변화
재량지출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2030년 동안 2026년 본예산 대비 연평균 8.3% 증가(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 증가) - 현행 수준을 의미하는 기준전망은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단위: 조원)

	2026 본예산	2026 추경	2027 예산안	2028 계획	2029 계획	2030 계획
재정전망	340.2	355.5	394.1	422.8	445.5	467.3
기준전망			348.5	356.1	363.3	370.5

4. 재정수지 전망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 27.5조원 흑자(GDP 대비 0.8%), 2027년 62.9조원 흑자(1.8%), 2030년 23.7조원 적자(△0.6%)로 전망된다. 2026년의 경우 총수입 규모가 총지출보다 커 흑자를 보이나, 2028년 이후에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규모는 2026년 72.1조원(GDP 대비 2.2%)에서 2030년 68.3조원(1.7%)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흑자 규모가 큰 이유는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44.6조원 적자(GDP 대비 △1.4%), 2027년 4.3조원 흑자(0.1%), 2030년 92.1조원 적자(△2.3%)로 전망된다.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는 전반적으로 적자로 예상되는데,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대로 하락함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재정전망의 재정수지를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국세수입이 소폭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 개편 등으로 의무지출이 감소함에도 재량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2030년 동안 148.5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1]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통합재정수지	27.5	62.9	24.5	△10.5	△23.7
(GDP 대비 비율)	(0.8)	(1.8)	(0.7)	(△0.3)	(△0.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72.1	58.6	66.3	67.8	68.3
(GDP 대비 비율)	(2.2)	(1.7)	(1.8)	(1.8)	(1.7)
관리재정수지	△44.6	4.3	△41.8	△78.3	△92.1
(GDP 대비 비율)	(△1.4)	(0.1)	(△1.1)	(△2.0)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2]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현행 수준 대비)

(단위: 조원,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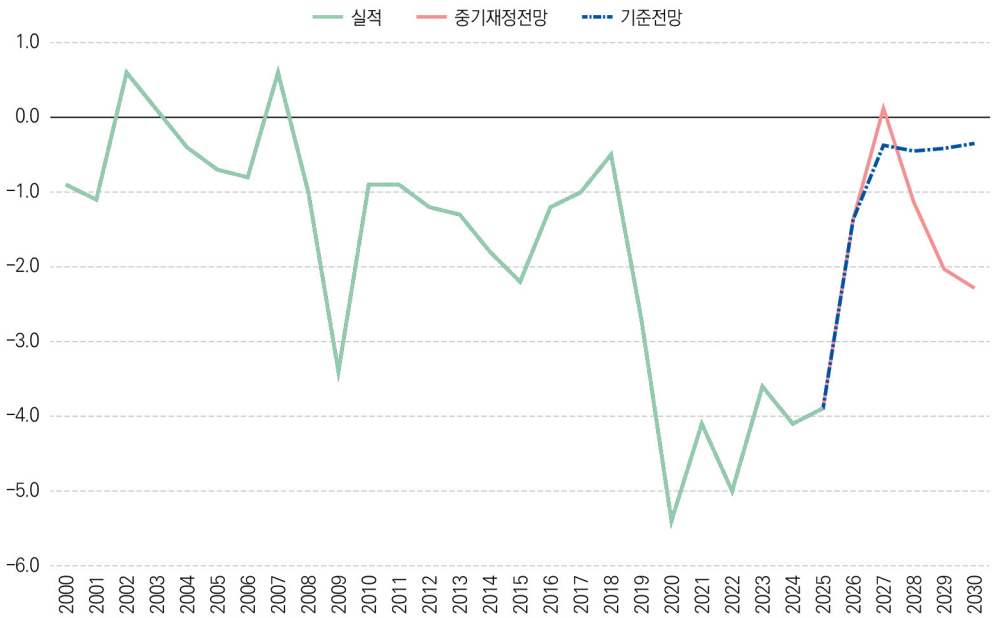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총수입	—	0.7	2.6	3.4	3.6	10.4
총지출	—	△16.7	28.0	65.8	81.8	158.9
통합재정수지	—	17.4	△25.3	△62.3	△78.2	△148.4
(GDP 대비 비율)	—	(0.5)	(△0.7)	(△1.6)	(△1.9)	
관리재정수지	—	17.4	△25.3	△62.3	△78.1	△148.5
(GDP 대비 비율)	—	(0.5)	(△0.7)	(△1.6)	(△1.9)	

주: 표 안의 수치는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 관리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사회보장성기금 및 공무원·군인연금 수지 전망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26년 65.7조원에서 2030년 67.0조원까지 지속 흑자 발생 전망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 입	122.4	118.5	132.2	140.8	149.9	5.2
지 출	56.7	62.4	67.6	74.5	82.9	10.0
수 지	65.7	56.1	64.6	66.3	67.0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학연금

○ 사학연금기금수지는 2026년 3.1조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지속 적자 발생 전망

- 2026년의 흑자는 기금운용 과정에서 자산의 현금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 기인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 입	9.9	6.5	6.4	6.5	6.7	△9.5
지 출	6.8	7.1	7.4	7.7	8.1	4.4
수 지	3.1	△0.6	△1.0	△1.2	△1.4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금수지는 2026년 2.6조원 흑자에서 2030년 1.9조원 흑자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 입	22.3	22.7	24.0	24.9	25.7	3.7
지 출	19.7	20.4	22.1	23.0	23.9	4.9
수 지	2.6	2.3	1.9	1.9	1.9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산재보험

○ 산재보험기금수지는 2026년 0.7조원 흑자에서 2030년에는 0.9조원 흑자로 흑자 규모 확대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 입	11.8	12.3	12.7	13.1	13.5	3.4
지 출	11.1	11.5	11.9	12.3	12.6	3.3
수 지	0.7	0.8	0.8	0.8	0.9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기금수지는 2026년 6.1조원 적자에서 2030년 8.7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확대

- 다만, 국가부담금과 국가보전금 등 정부내부거래를 포함한 수지는 2026년 1.2조원 흑자에서 2027~2028년 소폭 적자(△0.3~△0.4조원)로 돌아선 뒤 2029~2030년 0.2~0.5조원 흑자 전망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정부내부거래 미포함						
수 입	23.7	23.6	24.9	26.4	27.3	3.6
지 출	29.8	31.3	33.3	34.6	36.0	4.9
수 지*	△6.1	△7.7	△8.4	△8.2	△8.7	—
정부내부거래 포함						
수 입	31.1	31.0	33.0	35.0	36.3	3.9
지 출	29.9	31.4	33.4	34.6	36.1	4.8
수 지**	1.2	△0.3	△0.4	0.5	0.2	—

주: 1. 수지*=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금이자상환)
2. 수지**=수입(자체수입+국가부담금, 국가보전금 등 정부내부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금이자상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국가분) 등 정부내부지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군인연금

○ 군인연금기금수지는 2026년 4.0조원 적자에서 2030년 4.8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확대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 입	0.8	0.8	0.8	0.9	0.9	2.7
지 출	4.8	5.0	5.3	5.5	5.7	4.7
수 지	△4.0	△4.2	△4.4	△4.6	△4.8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가채무 전망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32]로 구분할 수 있고,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상환 등이 있다. 금융성 채무는 그 외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주식 외 유가증권, 융자)을 보유할 수 있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의미하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있다.

총수입·총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규모를 추정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외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그리고 지방정부 순채무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금액과 동일하게 가정한다. 전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임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6년 1,413.7조원(GDP 대비 43.3%)에서 2030년 1,711.4조원(42.5%)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2026년 987.7조원(GDP 대비 30.2%)에서 2030년 1,251.8조원(31.1%)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기준 국가채무는 현행 수준 대비 99.3조원 크고 GDP 대비 비율은 2.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잔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표 7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A+B)	1,413.7	1,512.4	1,586.7	1,642.2	1,711.4	4.9
(GDP 대비 비율)	(43.3)	(43.2)	(43.2)	(42.6)	(42.5)	
중앙정부 채무(A)	1,377.0	1,475.3	1,549.3	1,604.6	1,673.7	5.0
(GDP 대비 비율)	(42.2)	(42.1)	(42.1)	(41.6)	(41.5)	
적자성 채무	987.7	1,072.6	1,141.4	1,191.2	1,251.8	6.1
(GDP 대비 비율)	(30.2)	(30.6)	(31.0)	(30.9)	(31.1)	
금융성 채무	389.3	402.7	408.0	413.3	421.9	2.0
(GDP 대비 비율)	(11.9)	(11.5)	(11.1)	(10.7)	(10.5)	
지방정부 순채무(B)	36.7	37.1	37.4	37.6	37.7	0.7
(GDP 대비 비율)	(1.1)	(1.1)	(1.0)	(1.0)	(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4]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현행 수준 대비)

(단위: 조원,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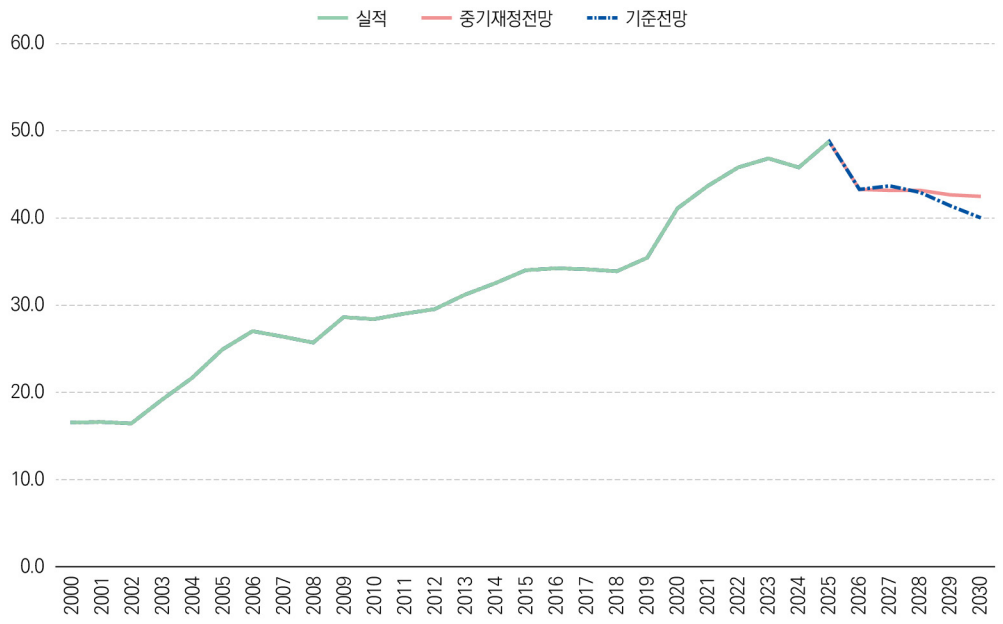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총수입	—	0.7	2.6	3.4	3.6	10.4
총지출	—	△16.7	28.0	65.8	81.8	158.9
관리재정수지	—	17.4	△25.3	△62.3	△78.1	△148.5
(GDP 대비 비율)	—	(0.5)	(△0.7)	(△1.6)	(△1.9)	
국가채무	—	△17.4	8.0	47.8	99.3	
(GDP 대비 비율)	—	(△0.5)	(0.2)	(1.2)	(2.5)	

주: 표 안의 수치는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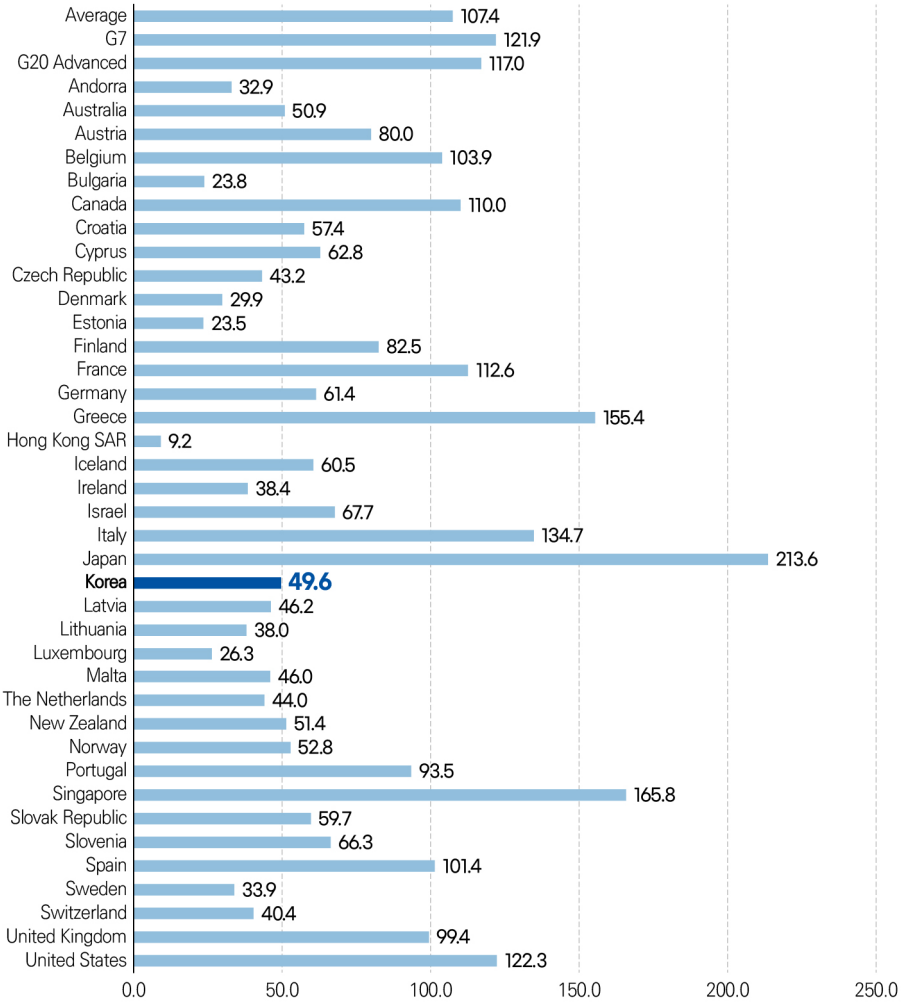
❑ 최근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ies)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현황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괄

- 중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이며, 포괄범위 상이

< 일반정부 부채(D2): 2024년 기준 >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6. 10.

Ⅲ.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 개 요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700.6조원에서 2030년 984.6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고, 총지출은 같은 기간 753.0조원에서 1,005.2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한다. 202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연간 3.1~100.8조원 규모의 적자를 보이며,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 기준 GDP 대비 49.0%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p 하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표 75]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본예산	추경	예산안	계획	계획	계획	증가율
총수입	675.2	700.6	880.8	920.5	951.8	984.6	8.9
국세수입	390.2	415.4	584.4	606.7	625.5	644.8	11.6
국세외수입	285.0	285.2	296.4	313.7	326.2	339.7	4.5
총지출	727.9	753.0	820.9	894.6	957.4	1,005.2	7.5
의무지출	387.7	397.5	426.8	471.9	511.8	537.9	7.9
재량지출	340.2	355.5	394.1	422.8	445.5	467.3	7.1
통합재정수지	△52.7	△52.5	59.9	25.8	△5.6	△20.6	
(GDP 대비 비율)	(△1.9)	(△1.9)	(1.9)	(0.8)	(△0.2)	(△0.6)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3.1	△48.0	△83.5	△100.8	
(GDP 대비 비율)	(△3.9)	(△3.8)	(△0.1)	(△1.5)	(△2.5)	(△2.9)	
국가채무	1,413.8	1,412.8	1,519.8	1,600.3	1,659.1	1,734.1	5.3
(GDP 대비 비율)	(51.6)	(50.6)	(48.3)	(48.9)	(48.8)	(49.0)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GDP 대비 비율에 반영한 명목GDP는 정부 전망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 9.

본 장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NABO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중기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정총량 수준과 주요 항목별로 차이를 설명한다.

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가. 거시경제변수 차이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지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변수와 전망모형 등이 정부와 달라 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있다.

먼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2026.7. 전망)은 2026년 12.3%에서 계획기간 동안 점차 하락하여 2030년에 4.0%에 이르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반면, NABO가 전망에 반영한 명목GDP 성장률(2026.9. 전망)은 2026년의 경우 22.0%로 정부보다 9.7%p 높은 수준이며, 이후 하락 추세는 정부와 동일하나 전망기간 동안 정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명목GDP 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전망치뿐 아니라 재정총량의 GDP 대비 비율 또한 차이가 발생한다.

[표 7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명목GDP 성장률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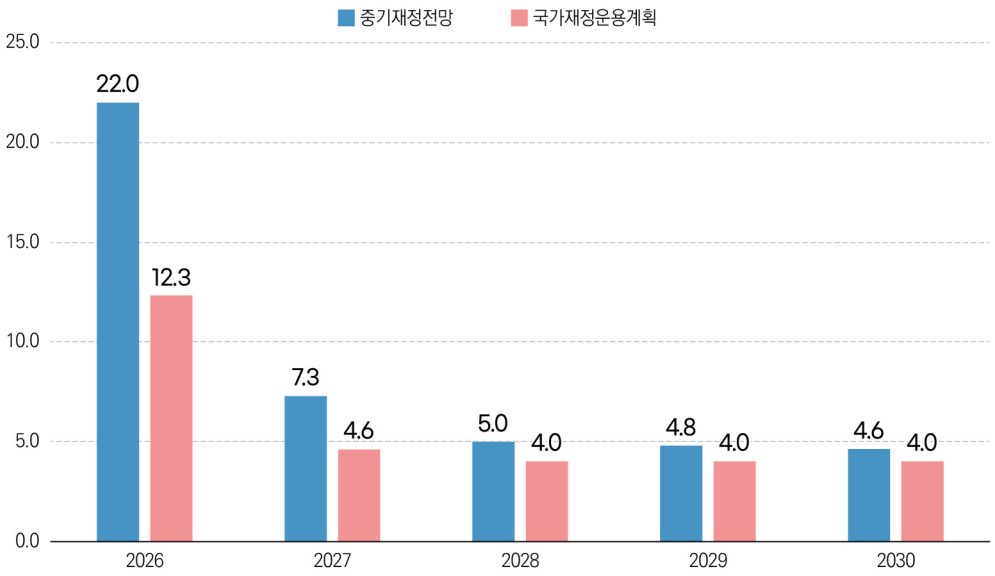
	2026	2027	2028	2029	2030
중기재정전망(A)	22.0	7.3	5.0	4.8	4.6
국가재정운용계획(B)	12.3	4.6	4.0	4.0	4.0
차이(A-B)	9.7	2.7	1.0	0.8	0.6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 아닌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2026.7.14.)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정부

[그림 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명목GDP 성장률

(단위: %)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 아닌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2026.7.14.)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정부

나. 재정총량 차이

총량 수준에서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총수입의 경우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53.6조원 크다. 이러한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국세수입을 향후 5년 동안 140.3조원 크게 전망한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2026.9.30.)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 국세수입 차이는 1.9조원으로 작아지며, 총수입은 5년 동안 NABO가 정부보다 90.5조원, 국세수입은 77.1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역시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큰데, 그 수준은 79.9조원으로 모두 의무지출 차이이다. 특히,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해 NABO가 정부보다 51.9조원 크게 전망하였으며,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명목GDP와 학령인구 변화율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NABO의 국세수입과 명목GDP가 정부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이전재원은 38.0조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단위: 조원, %p)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총수입 차이	83.4	9.4	13.1	20.1	27.5	153.6
국세수입 차이	65.1	9.3	15.2	22.2	28.5	140.3
(정부의 세수 재추계 기준)	(1.9)					(77.1)
국세외수입 차이	18.3	0.1	△2.0	△2.1	△1.0	13.4
총지출 차이	3.4	6.4	14.5	25.0	30.6	79.9
의무지출 차이	3.4	6.4	14.5	25.0	30.6	79.9
복지 분야	3.4	7.9	10.4	13.2	17.1	51.9
지방이전재원	0.0	0.4	5.6	14.3	17.7	38.0
이자지출	0.1	△1.9	△1.5	△2.5	△4.3	△10.1
기타 의무지출	—	—	—	—	—	—
재량지출 차이	—	—	—	—	—	—
통합재정수지 차이	80.0	3.1	△1.3	△4.9	△3.1	73.7
(GDP 대비 비율)	(2.7)	(△0.1)	(△0.1)	(△0.1)	(△0.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차이	17.0	△4.3	△7.6	△10.0	△11.8	△16.8
(GDP 대비 비율)	(0.2)	(△0.3)	(△0.5)	(△0.5)	(△0.6)	
관리재정수지 차이	63.0	7.4	6.2	5.2	8.7	90.5
(GDP 대비 비율)	(2.5)	(0.2)	(0.3)	(0.4)	(0.6)	
국가채무 차이	0.0	△7.4	△13.6	△16.9	△22.7	
(GDP 대비 비율)	(△7.3)	(△5.2)	(△5.8)	(△6.2)	(△6.6)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뺀 값으로, 양(+)의 값이면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나, 국가채무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1,412.8조원)이 아니라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전망치(1,413.7조원) 기준임
3. 국세수입의 괄호안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2026.9.30.)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정부

5년 합계 기준으로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크지만 상대적으로 총수입이 더 크므로 재정수지는 NABO가 정부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경우 NABO의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연금지출 등)이 정부보다 커 중기재정전망의 흑자 규모가 정부보다 5년 동안 16.8조원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보다 작기 때

문에 국가채무는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2030년 누적으로 22.7조원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NABO의 명목GDP 수준이 정부보다 높기 때문에 국가채무 금액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6.6%p 낮은 수준이다.

[표 7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명목GDP 및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중기 재정전망	명목GDP	3,265.4	3,502.8	3,677.0	3,852.7	4,030.3
	국가채무	1,413.7	1,512.4	1,586.7	1,642.2	1,711.4
	(국가채무 비율)	(43.3)	(43.2)	(43.2)	(42.6)	(42.5)
국가재정 운용계획	명목GDP	2,793.8	3,144.2	3,269.9	3,400.7	3,536.8
	국가채무	1,412.8	1,519.8	1,600.3	1,659.1	1,734.1
	(국가채무 비율)	(50.6)	(48.3)	(48.9)	(48.8)	(49.0)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 명목GDP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2027년 명목GDP는 2025년 국민계정(잠정) 경상GDP 2,676.7조원(한국은행, 2026.6)에 2026년 및 2027년 경상성장률 전망 12.3%, 4.6%(재정경제부, 2026.7.) 반영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다. 주요 항목별 차이

(1) 총수입

주요 항목별로 차이를 보면, 국세수입의 경우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6년 65.1조원(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27~2030년간 연도별로 9.3~28.5조원 상회하여 2026~2030년간 총 140.3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2026년 9월 당해연도 국세수입을 478.6조원으로 재추계(이하 '정부 재추계')한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NABO의 중기재정전망은 정부 전망 대비 2026년 1.9조원, 2026~2030년간 총 77.1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NABO 전망치(480.5조원)는 정부 재추계(478.6조원) 대비 1.9조원 높다. 이러한 전망 차이는 NABO가 기업 영업실적 개선세를 높은 경제성장률[33]을 바탕으로 정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세를 정부 전망 대비 1.9조원 높게 전망

33)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명목기준, %): (NABO) 22.0, (정부) 12.3

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7년의 경우 NABO의 국세수입 전망(593.7조원)이 정부 예산안(584.4조원)을 9.3조원 상회한다. 이러한 전망의 차이는 2027년 세입여건을 나타내는 경제전망에 있어서 명목GDP 성장률 등을 NABO(7.3%)가 정부(4.6%)보다 높게 전망하는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후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은 연도별로 2028년 621.9조원, 2029년 647.7조원, 2030년 673.3조원으로, 각각 정부 전망을 15.2조원, 22.2조원, 28.5조원 상회하여 전망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이후 전망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 등 전망에 있어서 NABO가 정부보다 매년 0.6~1.0%p 높을 것으로 전망[34]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도별로 △2.1~18.3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2026~2030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총 13.4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이 당초 계획안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 2026년을 제외하면,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차이는 △2.1~0.1조원 수준이며 중기재정전망이 2027~2030년 동안 총 5.0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을 제외할 경우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외수입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작은 이유는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의 융자원금회수 미수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5]

(가) 국세수입 주요 세목

이하에서는 국세수입의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NABO 전망과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에 대하여 서술한다. 단,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7년 예산안 외에 2028년 이후부터는 국세수입의 세목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6년 및 2027년 NABO 전망과 정부 계획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

34) 명목GDP 성장률(%): (NABO) '28년 5.0, '29년 4.8, '30년 4.6 vs. (정부) '28년 4.0, '29년 4.0, '30년 4.0

35) 2022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확대 및 저금리 공급 기조가 지속되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등으로 대출 공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차주들의 만기 연장 신청 등으로 인해 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실제 수납률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도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만기연장 등이 이어지며 융자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2026년 NABO 전망은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추계 간에 주요 세목별 전망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NABO는 152.1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136.8조원) 대비로는 15.3조원(11.2%) 높지만, 정부 재추계(152.4조원) 대비로는 0.4조원(△0.2%) 낮게 전망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NABO는 138.3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101.3조원) 대비 37.0조원(36.5%), 정부 재추계(136.4조원) 대비 1.9조원(1.4%) 높게 전망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NABO는 88.2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86.6조원) 대비 1.6조원(1.9%) 높지만, 정부 재추계(89.0조원) 대비로는 0.8조원(△0.9%) 낮게 전망하였다.

2027년 NABO 전망은 정부 예산안보다 9.3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정부 예산안 대비 5.4조원 높게 전망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정부 예산안을 각각 1.7조원, 1.9조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정부는 2026년 소득세수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6.4.) 당시 136.8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 재추계(2026.9.) 152.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NABO는 2026년 소득세수를 152.1조원으로 전망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5.3조원(11.2%) 높지만, 정부 재추계 대비로는 소폭(0.4조원, △0.2%)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2027년의 경우 정부는 180.0조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NABO는 181.7조원으로 전망하여, NABO의 전망이 정부 예산안보다 1.7조원(0.9%)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소득세에서의 전망 차이는 주로 근로소득세의 전망 차이에서 기인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정부 예산안은 2026년 정부 재추계(77.7조원) 대비 24.8조원(31.9%) 증가한 102.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반면, NABO는 2026년 전망(78.1조원) 대비 26.3조원(33.7%) 증가한 104.4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정부 예산안보다는 1.9조원(1.9%) 높은 수준이다. 양 기관의 전망 차이는 임금상승률 등 고용지표에 대한 전제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NABO는 2027년 명목임금 상승률을 6.5%로 2026년 수준(3.2%)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데 반해, 정부는 2027년 명목임금 상승률(3.3%)을 2026년보다 소폭 개선된 증가율을 전제

하여 전망하였다. 이러한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의 차이는 기업실적의 증가에 따른 성과급 인상 등의 임금반영 수준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79] 중기재정전망과 예산(안)의 비교: 소득세

(단위: 조원)

	2026			2027		
	추경(A)	NABO(B)	차이(B-A)	예산안(C)	NABO(D)	차이(D-C)
소득세	136.8 (152.4)	152.1	15.3 (△0.4)	180.0	181.7	1.7

주: 괄호 안은 정부 재추계(2026.9.)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정부는 2026년 법인세수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당시 101.3조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 재추계 시점에는 136.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NABO는 2026년 법인세수를 138.3조원으로 전망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37.0조원(36.5%), 정부 재추계 대비로는 1.9조원(1.4%)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법인세수 전망의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반도체 등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세를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2026년 정부 재추계(136.4조원) 대비 80.3조원(58.9%) 증가한 216.7조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NABO는 2026년 전망(138.3조원) 대비 83.8조원(60.6%) 증가한 222.1조원으로 법인세를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5.4조원(2.5%)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의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대내외 수요 전망으로 인한 수출 증가, 내수회복 등 거시지표의 개선세를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함으로써 법인 영업실적의 증가세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80] 중기재정전망과 예산(안)의 비교: 법인세

(단위: 조원)

	2026			2027		
	추경(A)	NABO(B)	차이(B-A)	예산안(C)	NABO(D)	차이(D-C)
법인세	101.3 (136.4)	138.3	37.0 (1.9)	216.7	222.1	5.4

주: 괄호 안은 정부 재추계(2026.9.)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가가치세

정부는 2026년 부가가치세수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6.6조원, 정부 재추계 기준 89.0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NABO는 2026년 부가가치세수를 88.2조원으로 전망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6조원(1.9%) 높고, 정부 재추계 대비로는 0.8조원(△0.9%)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NABO 모두 8월까지 누적 실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12.8%)가 9월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NABO는 9월 이후 환율의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부보다 둔화폭이 클 것[36]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2026년 정부 재추계(89.0조원) 대비 2.4조원(2.6%) 증가한 91.4조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NABO는 2026년 전망(88.2조원) 대비 5.0조원(5.7%) 증가한 93.3조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1.9조원(2.1%)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의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여건 개선세 등을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81] 중기재정전망과 예산(안)의 비교: 부가가치세

(단위: 조원)

	2026			2027		
	추경(A)	NABO(B)	차이(B-A)	예산안(C)	NABO(D)	차이(D-C)
부가가치세	86.6 (89.0)	88.2	1.6 (△0.8)	91.4	93.3	1.9

주: 괄호 안은 정부 재추계(2026.9.)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6) 2026년 9월 이후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전망(전년동기 대비, %): (정부) 11.5, (NABO) 7.9

(나) 사회보장기여금 및 연금수입

국민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기여금 수납액은 2026년 66.7조원에서 2030년 91.6조원까지 연평균 8.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NABO의 중기재정전망은 국민연금기여금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향후 5년간(2026~2030년) 4.2조원 더 수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8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68.5	74.2	80.1	85.9	92.0	7.7
국가재정운용계획(B)	66.7	73.5	79.4	85.4	91.6	8.3
						합계
차이(A-B)	1.8	0.8	0.8	0.4	0.4	4.2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한다. 2026년의 경우 최근 7월까지의 수납 실적(39.5조원 징수)과 가입자 수 추세 등에 근거하여 정부의 기금운용계획보다 1.8조원 더 높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2027년 이후의 전망은 최근 가입자 수 추세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와 이러한 가정의 차이로 인해 수입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사학연금기여금은 2026년 4.0조원에서 2030년 4.7조원까지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NABO의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합계 0.2조원 큰 규모이다.

[표 8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사학연금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3.99	4.14	4.30	4.48	4.66	4.0
국가재정운용계획(B)	3.99	4.20	4.37	4.54	4.73	4.3
						합계
차이(A-B)	0.0	△0.05	△0.07	△0.06	△0.06	△0.2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의 경우 최근 7월까지의 수납 실적(2.3조원 징수) 등에 근거할 때 당초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규모와 유사한 수준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7년 이후 기간의 NABO의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차이는 전망의 가정에 대한 차이에 기인한다. NABO는 최근 가입자 수 및 가입자 임금 추이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였는데, 정부와는 가입자 수 추정 방식의 차이,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등에 기인하여 수입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용보험기여금은 2026년 21.3조원에서 2030년 25.2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1.2~0.4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2.5조원 적게 수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고용보험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1.7	22.0	23.1	24.0	24.8	3.5
국가재정운용계획(B)	21.3	22.5	23.8	25.2	25.2	4.4
						합계
차이(A-B)	0.4	△0.5	△0.7	△1.2	△0.4	△2.5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의 경우 상반기 수납 실적과 2025년 연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대비 동 기간(2025년 1~6월) 수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산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0.4조원 초과 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고용주부담금 13.6조원과 피고용자분담금 8.9조원을 징수하여 사회보장기여금 22.5조원을 수납할 것으로 계획한 반면, NABO는 같은 해 사회보장기여금이 22.0조원 수납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보다 0.5조원 적게 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고용보험 사회보장기여금 산출의 주요 변수인 보수총액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NABO와 정부의 임금근로자 및 취업자 수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과 경제성장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로 인해 보수총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NABO와 정부의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취업자 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그리고 전망모형의 차이로 인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재보험기여금은 2026년 10.1조원에서 2030년 11.9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4~0.2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0.2조원 적게 수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산재보험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10.3	10.7	11.1	11.5	11.9	3.8
국가재정운용계획(B)	10.1	10.6	11.2	11.9	11.9	4.1
						합계
차이(A-B)	0.2	0.1	△0.1	△0.4	0.05	△0.2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의 경우 상반기 수납 실적 등에 근거할 때 당초 정부의 기금운용

계획보다 0.2조원 초과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정부의 계획보다 초과 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고용주부담금 10.3조원과 피고용자분담금 0.3조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사회보장기여금 10.6조원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NABO는 같은 해 사회보장기여금이 10.7조원 수납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두 기관의 전망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이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산재보험 사회보장기여금 산출에 있어 주요 변수인 보수총액의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보수총액의 추산에 있어 NABO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명목임금상승률,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그리고 전망모형의 차이로 인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2026년 21.2조원에서 2030년 25.2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3~0.3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간 0.5조원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경우 7월까지의 수납 실적은 73%로 높으나, 최근 3년(2023~2025년) 예산액 대비 최종 수납률(98%), 2025년 결산 기준 가입자 수와 공무원 직종별·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를 고려하였을 때 당초 정부의 기금운용계획보다 0.3조원 적게 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의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안은 기여금과 지자체연금부담금을 예산액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최근 3년 평균 수납률을 적용한 NABO의 전망이 정부보다 0.3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NABO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그리고 전망모형의 차이로 인해 수입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2028~2030년 보수예산 증가율을 3.3%로 가정하면서도 연금기여금의 증가율은 1.5~2.5%로 낮게 계획하고 있어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

나, NABO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가입자 수가 연평균 0.33% 증가하고 보수는 3.17%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기여금이 정부보다 많다. 다만 지자체연금부담금 중 보전금은 NABO가 정부보다 적게 전망하여 2028~2030년 연금수입 합계는 NABO가 정부보다 0.1조원 많은 수준에 그친다.

[표 8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공무원연금 연금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0.9	21.2	22.7	24.3	25.2	4.8
국가재정운용계획(B)	21.2	21.5	23.0	24.0	25.2	4.3
						합계
차이(A-B)	△0.3	△0.3	△0.2	0.3	0.1	△0.5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연금수입은 2026년 0.79조원에서 2030년 0.85조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229~1억원의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간 441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경우 7월까지의 수납 실적은 56.4%이나, 최근 3년(2023~2025년) 예산액 대비 최종 수납률이 95.3~97.3%로 고지액이 전액 수납되지는 않는 점과 2025년 결산 기준 가입자 수 및 계급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를 고려하였을 때 당초 정부의 본예산보다 229억원 적게 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납입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기여금을 전년 대비 1.3% 감액 편성한 반면, NABO는 가입자 수가 완만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양측의 차이가 46억원으로 좁혀진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정부는 2029년 기여금을 전년 대비 4.6% 늘려 계획한 반면 NABO는 가입자 수와 보수상승률을 완만하게 적용하여 연 3.2% 증가로 전망하였다.

[표 8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군인연금 연금수입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0.76	0.77	0.80	0.82	0.85	2.7
국가재정운용계획(B)	0.79	0.78	0.80	0.83	0.85	2.1
						합계
차이(A-B)	△0.02	△0.00	0.00	△0.01	△0.01	△0.04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총지출

재량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차이가 없으나, 의무지출의 경우 2026~2030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79.9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지방이전재원 등은 NABO가 정부보다 크나, 이자지출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51.9조원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항목별로 보면 공적연금 22.7조원, 사회보험 15.3조원, 공공부조 12.2조원 등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 추세 및 2027년 이후 정책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5년 차이 합계 21.0조원), 고용보험(9.6조원), 기초연금(6.4조원) 등에서 정부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38.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NABO의 국세수입이 정부보다 77.1조원(정부 재추계 기준) 크기 때문에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정부보다 14.1조원 크게 전망되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NABO의 명목GDP 성장률이 정부보다 높기 때문에 최근 3년 명목GDP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는 교부금이 정부보다 23.6조원 큰 것으로 나타났다.[37]

한편, 이자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10.1조원

37) NABO와 정부 모두 학령인구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근거하므로 차이가 없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NABO 간 이자지출의 차이는 주로 국고채 이자지출에서 발생하는데(5년 차이 합계 11.9조원), 중기재정전망은 2026년 28.9조원에서 2030년 39.6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3조원에서 2030년 44.1조원으로 연평균 10.8%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규모와 이자율, 그리고 전망 모형 차이에서 비롯된다.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보다 작으므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정부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 공적연금

국민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54.5조원에서 2030년 73.8조원까지 연평균 7.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NABO 중기재정전망은 5년간 국민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상치보다 21.0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

[표 8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국민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55.8	61.5	66.7	73.5	81.9	10.1
국가재정운용계획(B)	54.5	59.5	62.6	68.1	73.8	7.9
						합계
차이(A-B)	1.3	2.0	4.1	5.4	8.2	21.0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의 경우 정부는 54.5조원이 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집행 진도율 추이(7월 기준 31.9조원 집행)를 고려한 결과 집행액이 당초 계획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이후는 기존 가입자와 가입이력자, 신규 가입자의 가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수급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정부와 이러한 가정의 차이로 인해 전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6.1조원에서 2030년 7.5조원으로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NABO의 중기재정전망은 정부 예상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차이는 5년 합계 약 0.3조원이다.

[표 89]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사학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6.1	6.4	6.7	7.1	7.4	5.1
국가재정운용계획(B)	6.1	6.4	6.8	7.2	7.5	5.5
						합계
차이(A-B)	0.03	△0.05	△0.1	△0.1	△0.1	△0.3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의 경우 정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수준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7년 이후의 경우 NABO와 정부의 수급자 수와 평균 단가 산출 방식의 차이 등 전망모형의 차이로 인해 재정소요 규모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28.6조원에서 2030년 34.2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4~0.7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간 1.5조원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의무지출 중 약 90%를 차지하는 퇴직급여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

2026년의 경우 정부는 공무원 퇴직급여 사업에 연금수급자 수의 증가를 반영하고 퇴직연금 등 급여액 인상 시 2.0%(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적용하여 28.6조원의 계획액을 편성하였다. NABO는 2025년 결산 기준 재직자 수와 퇴직률 등으로 수급자 수를 추정하고, 2026년 7월까지의 집행률(퇴직급여 57.4%, 퇴직수당

55.8%)을 반영하여 의무지출을 정부보다 0.4조원 적은 28.3조원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에는 정부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9.6조원을 편성한 반면, NABO는 5.9% 증가한 29.9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수급자 수 증가와 급여액 인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증가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정부가 매년 4.9~5.0%의 일정한 증가율을 적용한 반면 NABO는 연도별 퇴직자 수 전망에 따라 4.2~6.2%로 전망하였다. 이는 전망기간 중 정년퇴직자가 증가하는 재직자 연령 구조[38]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9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공무원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8.3	29.9	31.8	33.1	34.5	5.1
국가재정운용계획(B)	28.6	29.6	31.1	32.6	34.2	4.5
						합계
차이(A-B)	△0.4	0.3	0.7	0.5	0.3	1.5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2026년 4.7조원에서 2030년 5.6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1조원 내외의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간 0.5조원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군인연금 의무지출 중 약 90%를 차지하는 퇴직급여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

2026년의 경우 정부는 군인 퇴직급여 사업에 연금수급자 수의 증가와 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4.7조원의 계획액을 편성하였다. NABO는 2025년 결산 기준 기수급자 수와 국방부의 계급별 전역인원 자료로 수급자 수를 추정하고, 2026년 7월

38) 공무원연금 의무지출 결산액은 2021년 19.0조원에서 2025년 26.6조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하였으며, 2025년 결산 기준 재직자의 연령별 인원은 55~59세 151,071명, 50~54세 184,796명으로 2026~2030년 중 정년에 도달하는 인원이 많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증가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까지의 집행률(퇴직급여 58.5%, 퇴직수당 66.8%)과 최근 3년간 결산액이 당초예산을 상회해 온 점을 반영하여 의무지출을 4.8조원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에는 정부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4.9조원을 편성한 반면, NABO는 5.1% 증가한 5.0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5년(2021~2025년) 결산액이 연평균 6.5%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증가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NABO는 퇴역연금 수급자 수가 매년 2,300명 안팎 순증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2028~2030년 합계 0.3조원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9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군인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4.8	5.0	5.3	5.5	5.7	4.7
국가재정운용계획(B)	4.7	4.9	5.2	5.4	5.6	4.5
						합계
차이(A-B)	0.0	0.1	0.1	0.1	0.1	0.5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회보험

고용보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16.2조원에서 2030년 18.4조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1.2~2.3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9.6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고용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17.4	18.2	19.0	19.8	20.6	4.3
국가재정운용계획(B)	16.2	16.4	16.7	17.5	18.4	3.2
						합계
차이(A-B)	1.2	1.8	2.3	2.2	2.1	9.6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의 경우 당초 정부는 구직급여에 1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NABO 역시 유사한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성보호지원 사업의 경우 4.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4조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2026년 상반기 사업 추진 결과 높은 출산율 및 육아휴직 사용률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의 계획액이 예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집행된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에는 당초 계획액보다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정부는 2026년 계획액 대비 약 0.1조원 증액된 11.7조원의 구직급여를 편성하였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육아휴직급여 3.5조원을 포함하여 4.3조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4조원의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을 계획하였다. 반면, NABO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 고용보험 의무지출에 총 18.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출산율과 육아휴직 사용률에 따른 2026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이며, 2027년 이후 NABO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명목임금상승률, 출생아 수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그리고 전망모형의 차이에 기인한다. 202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NABO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명목임금상승률, 출생아 수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그리고 전망모형의 차이로 인해 재정소요규모가 다른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8.1조원에서 2030년 10.4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연도별로 △0.1~0.6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2.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산재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8.8	9.2	9.6	10.0	10.3	4.1
국가재정운용계획(B)	8.1	8.6	9.1	9.7	10.4	6.3
						합계
차이(A-B)	0.6	0.6	0.6	0.3	△0.1	2.0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 정부는 산재보험 의무지출에 연간 8.1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27년은 8.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안을 편성하였다. 반면, NABO 중기재정전망은 산재보험 의무지출에 2026년 8.8조원, 2027년 9.2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NABO의 중기재정전망이 최근 수급자 수 추이 및 1인당 지급단가 등 실적치를 반영한 결과이며, 근로자 수와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실적치의 반영 여부와 NABO와 정부의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그리고 전망모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소요 규모가 다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지출은 2026년 13.8조원에서 2030년 17.2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3~0.9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2.4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9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건강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13.8	15.3	16.2	17.1	18.1	7.0
국가재정운용계획(B)	13.8	15.0	15.7	16.4	17.2	5.6
						합계
차이(A-B)	—	0.3	0.6	0.7	0.9	2.4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의 경우 정부는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의무지출 예산액을 전액 소진하고 별도의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NABO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망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보수월액 증가율 1.98%, 보험료율 인상률 1.48% 등을 가정한 축약형 모형[39]을 통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95.9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정부 전망에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성과급 확대 등 임금 상승 여건은 반영하지 않은 반면, 예산안 제출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인상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두 가정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었음에도 정부 전망은 NABO 전망(99.4조원)보다 3.5조원 낮은 수준이다.

2028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도별 규모만 제시할 뿐, 이를 산출하기 위한 가입자 수, 보수월액 증가율, 보험요율 및 국고지원율 등 주요 전망 가정과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아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NABO와 정부의 전망모형 및 주요 가정의 차이로 재정소요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26년 2.6조원에서 2030년 3.0조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1~0.5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

39) 전전년도 보험료 결산액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 보험료율 인상률과 최근 가입자 수·보수월액 증가율을 곱하여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출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1.2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9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6	2.8	3.0	3.2	3.5	7.7
국가재정운용계획(B)	2.6	2.6	2.7	2.9	3.0	4.0
						합계
차이(A-B)	—	0.1	0.3	0.4	0.5	1.2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9% 이상 집행하고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NABO는 2026년 지출액을 예산액과 동일하게 전망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원(0.7%)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2026년의 11.6조원에 비해 0.7조원 증액된 12.3조원으로 가정하고, 국고지원율을 20%에서 18.9%로 인하한 것에 기인한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NABO와 정부의 거시경제변수 전망 차이, 전망모형의 차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소요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생계급여는 2026년 9.2조원에서 2030년 17.0조원으로 연평균 16.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NABO의 중기전망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5년간 총 2.2조원의 지출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9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생계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9.9	11.4	13.1	15.0	17.2	14.9
국가재정운용계획(B)	9.2	10.8	12.7	14.8	17.0	16.6
						합계
차이(A-B)	0.7	0.6	0.4	0.2	0.3	2.2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와 정부 전망 간 차이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6년의 경우 정부는 생계급여에 연간 9.2조원의 국고가 집행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26년 9월까지의 집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0.7조원 더 큰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2025년 말 수급가구 수에 2021~2025년 평균 수급가구 수 증가율(106.5%)을 적용하여 수급가구 수를 산출하였고, 고시로 확정된 2027년 기준중위소득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2027년 예정된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반영하였다. NABO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를 기초로 최근 가구원수별 수급가구 비중 등을 적용하여 수급가구 수를 추정하였으며, 과거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지급 단가 간 비율의 추이 등을 고려하였다.

2028년 이후의 전망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구체적인 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NABO와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상승률과 전망모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소요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의료급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2026년 10.1조원에서 2030년 15.3조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3~0.9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간 2.1조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9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의료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10.4	12.4	13.2	14.6	16.2	11.7
국가재정운용계획(B)	10.1	12.3	12.9	14.1	15.3	10.9
						합계
차이(A-B)	0.3	0.1	0.3	0.5	0.9	2.1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의 경우 최근 8월까지의 지출 실적 등에 근거할 때 정부의 예산액에 비해 추가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의 경우 수급자 수 증가, 의료급여 단가 인상 등으로 기본진료비가 14.4% 증가한 11.7조원으로 편성되었고, 2025년 및 2026년 미지급금 5,829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또한 일반식 식대 단가 인상 및 하반기 중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신설로 1,8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8년 이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본진료비의 과거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전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NABO의 전망과는 전망모형의 차이,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출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2026년 3.2조원에서 2030년 5.3조원으로 연평균 13.2%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09~0.32조원 작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0.91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주거급여 예산의 94%를 차지하는 임차급여 전망 모형과 전망에 적용되는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2026년에도 주거급여 예산은 당초 편성규모보다 0.3조원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8월까지의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임차급여 수급가구 수와 월평균 지급단가 증가 속도가 예산편성 시 가정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 임차급여 예산을 월평균 지급단가 20.98만원, 수급가구 수 142.5만가구로 가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수급가구 수는 2025년 실적(146.7만가구)보다도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지급단가도 2026년 기준임대료 4.7~11.0% 인상에도 2025년 실적(월평균 20.4만원)대비 2.8% 높은 수준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2026년 임차급여 월 집행액은 1~8월 기간동안 월평균 0.87%씩 증가하여, 예산상 월평균 임차급여액(2,513억원)을 9.1% 상회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2022년(626억원)과 2025년(156억원)에도 수급자 수와 지원금액 증가로 예비비를 배정받은 바 있고, 정부도 2026년 2,584억원의 예비비 추가 배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8] 주거급여 임차급여 집행액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임차급여 지출규모	2,581	2,594	2,641	2,664	2,672	2,734	2,715	2,742	2,668
전월대비	—	0.5	1.8	0.9	0.3	2.3	△0.7	1.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27년의 경우 정부는 주거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9.7% 증가한 3.8조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주거급여 임차급여 집행 추이와 2027년 기준중위소득(6.70%)과 기준임대료(1.2만원~5.0만원) 인상폭을 감안하면, 실제 지출 증가율이 이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이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주거급여 예산을 2028년에는 전년 대비 10.6%, 2029년 11.8%, 2030년 11.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반면, NABO는 2028년 이후의 경우 가구 수 증가세 둔화와 단가 상승률 등의 안정화를 전제로 2028년 9.5%, 2029년 10.7%, 2030년 1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NABO와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 가정과 대상 가구 수 전망 방법과 지원단가 전망 가정의 차이 등 각 기관의 전망모형의 차이에 기인하여, 급여 지출 규모도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9]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주거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3.5	3.9	4.4	4.9	5.5	11.5
국가재정운용계획(B)	3.2	3.8	4.2	4.7	5.3	13.2
						합계
차이(A-B)	0.32	0.09	0.15	0.17	0.19	0.91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2026년 0.17조원에서 2030년 0.19조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003~0.017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0.024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교육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0.17	0.19	0.19	0.19	0.20	4.2
국가재정운용계획(B)	0.17	0.19	0.19	0.19	0.19	2.0
						합계
차이(A-B)	0	△0.003	0.002	0.009	0.017	0.024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교육급여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사업 시행 연도에 예산액을 전액 집행처리하고 2회계연도 후에 정산하는 구조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이전 회계연도의 정산액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어[40] 2026년의 경우 해당연도 예산 수치를 준용하였다.

2027년의 경우 NABO와 정부의 교육급여 수급자 전망이 상이하여 차이가 발

40) 최근 3년 정산액은 2023년 37억원, 2024년 10억원, 2025년 75억원이다.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NABO와 정부는 모두 기초인구 전망에 실적치에 기반한 급여항목별·학교급별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기초인구 측면에서 NABO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여 전망한 반면,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를 기반으로 전망하여 대상자 수가 상이하다. 이에 단가 및 국고보조율이 동일함에도 대상인구 설정에 따라 수급자 수와 교육급여 지출전망의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2028년 이후의 차이는 NABO가 기준중위소득 및 단가 상승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NABO는 수급자 비율이 매년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0.1~0.16%p) 증가폭을 매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의 최근 상승률이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의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3.0~10.2%)을 적용하여 지원단가를 전망하였다. 그 결과 NABO 전망은 2028년 이후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정부는 급여항목별·수급자 비율 및 단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8년 이후 지출규모가 학령인구(6~17세)의 감소와 함께 감소한다. 이러한 전망가정의 차이로 2028년 이후 NABO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상회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그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초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초연금의 국비 지출이 2026년 23.1조원에서 2030년 30.1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NABO의 중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망하는 규모보다 기간 합계 6.4조원의 지출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0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기초연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1.8	27.2	29.6	31.2	32.9	10.8
국가재정운용계획(B)	23.1	25.7	28.3	29.2	30.1	6.8
						합계
차이(A-B)	△1.3	1.6	1.3	2.0	2.8	6.4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당초 2026년 기초연금 지급에 국비 23.1조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집행 진도율 추이를 고려한 결과 예산을 하회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6년의 수급률이 2021~2025년의 수급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41)]

2027년 예산안에는 앞서 2장에서 서술한 제도변화(차등급여 지급 등)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전액 수급자 수 대비 감액 수급자 수 비(ratio)를 83.7:16.3으로, 전액 수급액 대비 감액 수급액 비율은 16.3%로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NABO의 경우 과거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전액 수급액 대비 감액 수급액 비율의 대리값(proxy)[42)]을 도출한 후 해당 추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과거 수급자 정보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 낮고 소득인정액 수준이 낮으므로 급여를 감액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부 2인 수급 비율도 소득하위 30% 이하 구간에서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통계상 2026년 8월 기준 수급률은 65.02%이다. 이는 소급분이 반영되지 않아 최종 수급률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 소급분 미적용 수급률과 적용 수급률 간의 차이가 0.4~0.5%p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2) 실제 제도개편 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사람들 중 감액을 적용받게 될 사람들의 수와 급여의 감액 수준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조치 때문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을 감액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2027년 소득구간별 선정기준액과 2027년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소득역전방지에 따른 감액 규모를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NABO는 가용자료의 제약 하에서 과거 수급자 정보를 대리값(proxy)으로 활용하여 전망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 NABO의 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정부 전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NABO는 앞서 언급한 가정을 유지하였다. 이에 수급률에 대한 가정, 전망 모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소요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장애인연금의 국비 지출은 2026년 0.9조원에서 2030년 1.4조원까지 연평균 11.5%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NABO는 같은 기간 장애인연금 국비 지출이 1.0조원에서 1.5조원까지 연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0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장애인연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1.0	1.2	1.5	1.5	1.5	12.3
국가재정운용계획(B)	0.9	1.1	1.3	1.4	1.4	11.5
						합계
차이(A-B)	0.1	0.1	0.2	0.1	0.1	0.6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의 경우 8월까지 집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올해 정부의 예산에 편성된 금액(0.9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유형별로 수급자 수를 추정하여 각각에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27년 7월부터 신규수급자가 될 3급 단일 장애인 수에 대한 추정치가 NABO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NABO는 지난 5년간 소득계층별 3급 단일 장애인 수의 추이를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NABO와 정부의 장애발생률과 유형별 수급자 비중 등 전망모형의 차이로 인해 재정소요 규모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 기타 복지지출

보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2026년 5.6조원에서 2030년 6.3조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에 비해 5년 간 1.1조원 더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탁병원 진료 0.4조원, 보훈병원 진료 0.4조원, 6.25자녀수당 0.2조원, 참전명예수당 0.1조원 순이다.

먼저, 2026년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훈병원 진료와 위탁병원 진료이다. 정부는 2026년 보훈병원 4,505억원, 위탁병원 2,6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8월 기준 보훈병원 진료 집행률 96.3%, 위탁병원 진료 집행률 84.6%로, 통상적인 집행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보훈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진료실적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 간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이용하였으며, 2025년 발생한 미지급금을 2026년 예산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예산 이용 및 미지급금 발생은 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 예산 편성 시, 진료인원 및 단가를 낮은 수준으로 전망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027년에도 정부는 보훈병원 진료와 위탁병원 진료 예산 편성 시, 2025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적정진료 유도 및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원 및 단가를 감축조정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보훈병원 진료와 위탁병원 진료의 경우 2026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진료단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소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2028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보상금, 6·25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이다. 보상금의 경우, 2028년 이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상금 단가 인상률을 대상·훈격·급수별로 0.4~5.1%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특히 2029~2030년의 경우 2.7~2.8%로 가정하였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등 관계법률에

서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 및 최근 보상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과소전망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25자녀수당의 경우 정부는 2029~2030년 단가 인상률을 0.9~1.0% 수준으로 가정한 반면, NABO의 중기재정전망은 최근 5년간 수당 단가 연평균 증가율 5.1%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인원을 최근 3년간 증감률 9.3%를 적용하여 전망한 반면, NABO의 중기재정전망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령별 인원에 국가데이터처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표 10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보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5.8	6.1	6.3	6.5	6.7	3.8
국가재정운용계획(B)	5.6	6.1	6.1	6.2	6.3	2.7
						합계
차이(A-B)	0.2	△0.0	0.2	0.3	0.5	1.1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아동수당에 대한 국비 지출이 2026년 2.5조원에서 2030년 5.4조원까지 연평균 21.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NABO는 해당 기간 정부 계획보다 1.1조원의 지출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0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아동수당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6	3.1	4.0	5.2	5.9	22.2
국가재정운용계획(B)	2.5	2.9	4.0	4.9	5.4	21.2
						합계
차이(A-B)	0.2	0.1	△0.0	0.3	0.5	1.1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26년의 경우 정부는 아동수당 국비 지급액이 총 2.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9월까지의 집행 진도율 추이를 반영한 결과 정부 계획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7년의 경우, 정부는 2027년 7월 이후 기존의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면서, 우대지역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10월 초 현재 우대지역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NABO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우대지역 아동 비율의 산출 근거를 획득하지 못하여 정부 예산안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다만, 아동인구는 기본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되 0세 인구에 대해서는 2025년의 경우 실적치를 바탕으로 보정하였으며, 2026~2027년의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출생아 수 전망치를 바탕으로 보정하였다. 또한, 2028년 이후 0세 인구는 최근의 높아진 출생아 추이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될 아동 수의 전망치가 상이하여 전망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이후의 경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편성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2027년과 마찬가지로 아동 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급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2026년 2.4조원에서 2029년 0.12조원까지 감소한 후 폐지될 계획이다. NABO는 정부의 계획을 반영한 결과 해당 기간 정부 전망보다 총 0.5조원이 덜 지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0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부모급여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5	2.3	0.6	0.04	—	순감
국가재정운용계획(B)	2.4	2.3	1.2	0.12	—	순감
						합계
차이(A-B)	0.2	0.0	△0.6	△0.1	—	△0.5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의 2026년의 전망 결과는 8월까지의 집행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부모급여의 국비 지급액이 총 2.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 지출액은 예산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0세 인구가 정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이후 기간의 차이는 사업의 대상자인 0~1세 아동인구와 가정보육·시설보육 아동 비율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NABO는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준용하되 2025년의 경우 출생아 실적치를 고려하였고, 2026~2027년의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출생아 수 전망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25년 부모급여 지급 실적에 따른 유형별 수급 비중과 최근 부모보육료 증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재정소요액을 추정하였다. 이 때, 시설보육 아동에 대한 지급 단가의 경우 최근 부모보육료와 아이돌봄 단가의 증가율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마)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2026년 74.0조원에서 2030년 120.7조원으로 연평균 13.0%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2~6.6조원 낮은 수준으로,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총 14.1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수입 전망과 이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전출분에 대한 반영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표 106]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74.0	77.4	103.1	122.3	127.3	14.5
국가재정운용계획(B)	74.0	77.2	101.0	117.1	120.7	13.0
						합계
차이(A-B)	-	0.2	2.1	5.2	6.6	14.1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이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ABO가 정부보다 연도별로 국세수입을 9.3~28.5조원 높게 전망하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규모도 NABO가 정부보다 크게 전망하였다. 미래대응기금 전출분의 경우,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가세수[43]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한다고 보았으며, 2028년 이후의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NABO는 이에 2027년 이후 내국세 등 전망이 추세치를 상회하여 추가세수가 양(+)의 값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추세치가 내국세 등 전망을 상회하여 추가세수가 0 이하의 값으로 산정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전출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6년 76.4조원에서 2030년 92.7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2027년까지는 차이가 없으나, 2028년부터 연도별로 3.6~11.1조원 낮은 수준으로,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총 23.6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이 동일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최근 2년간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증가율이 2027년까지는 NABO와 정부가 동일한 값을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8년 이후에는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이 정부보다 높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43)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 제출일자: 2026.9.3.)을 살펴보면, 내국세 세입(개별소비세 담배분 제외)에서 추세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추세치는 2년 전 내국세 세입 실적에 최근 10년(t-12~t-2년)간 내국세 세입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NABO 중기재정전망 및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2028년의 경우 추가세수가 양(+)의 값으로 산정되지만, 2029년 이후에는 NABO와 정부 모두 내국세 세입이 추세치를 하회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0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76.4	78.9	87.8	99.1	103.7	7.9
국가재정운용계획(B)	76.4	78.9	84.3	90.1	92.7	4.9
						합계
차이(A-B)	-	-	3.6	9.0	11.1	23.6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2026년 2.8조원에서 2030년 2.9조원으로 연평균 0.1%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05~0.14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0.27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2.8	2.8	2.7	2.8	2.9	0.6
국가재정운용계획(B)	2.8	2.6	2.7	2.7	2.9	0.1
						합계
차이(A-B)	0	0.14	△0.05	0.11	0.06	0.27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사업 시행 연도에 예산액을 전액 집행 처리하고 2회계연도 후에 정산하는 구조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이전 회계연도의 정산액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어 2026년의 경우 해당연도 예산 수치를 준용하였다.

2027년의 경우 NABO와 정부의 대상자 수 전망이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NABO가 기관별 취원율 실적치에 따른 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2027년 취원율을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공립 및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최근 3년간 연령별로 연평균 0.5~2.5%p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 취원율은 1.4~2.7%p 감소하였다. 이에 NABO는 2026년 연령별·기관별 취원율에 최근 3년 연평균 변화폭을 각각 가산하였으나, 정부는 2026년 수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대상자 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2028년 이후의 차이는 최근 출생아 수가 기존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가정을 상회함에 따라 NABO가 「NABO 인구전망 2025~2045」를 기초로 장래인구 전망을 조정한 것에 기인한다. 2025년 출생아 수 실적치 및 「NABO 인구전망 2025~2045」에 따른 2026~2027년 출생아 수 전망은 장래인구추계 0세 인구 대비 각각 117.1%, 131.7%, 125.8%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출생아 수와 0세 인구는 통계적 개념과 기준시점이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여 산출한 조정계수를 활용하였다. NABO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25~2027년 출생 코호트에 0세 인구 코호트를 고려한 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하였다. 해당 코호트는 2028~2030년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하므로 NABO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도별 지출규모 및 증감 경로에 차이를 보인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지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지원은 2026년 0.47조원에서 2030년 0.71조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NABO의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01~0.04조원 차이가 있으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0.07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9]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지원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0.47	0.68	0.67	0.69	0.72	11.3
국가재정운용계획(B)	0.47	0.64	0.68	0.66	0.71	10.7
						합계
차이(A-B)	0.00	0.04	△0.01	0.03	0.01	0.07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사업 시행 연도에 예산액을 전액 집행 처리하고 2회계연도 후에 정산하는 구조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이전 회계연도의 정산액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어 2026년의 경우 해당연도 예산 수치를 준용하였다.

2027년의 경우 NABO와 정부의 대상자 수 전망이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3년간 기관별 취원율 실적치에 따른 변동 추세를 반영한 NABO와 달리, 정부는 2026년 수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공립 및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최근 3년간 연령별로 연평균 0.5~2.5%p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 취원율은 1.4~2.7%p 감소하였다. 이에 NABO는 2026년 연령별·기관별 취원율에 최근 3년 연평균 변화폭을 각각 가산하여 2027년 이후 취원율을 전망하였다.

2028년 이후의 차이는 최근 출생아 수가 기존 장래인구추계 가정을 상회함에 따라 NABO가 「NABO 인구전망 2025~2045」를 기초로 장래인구 전망을 조정한 것에 기인한다. 2025년 출생아 수 실적치 및 「NABO 인구전망 2025~2045」에 따른 2026~2027년 출생아 수 전망은 장래인구추계 0세 인구 대비 각각 117.1%, 131.7%, 125.8%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출생아 수와 0세 인구는 통계적 개념과 기준시점이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여 산출한 조정계수를 활용하였다. NABO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25~2027년 출생 코호트에 0세 인구 코호트를 고려한 조정계수를 곱하여 조정하였다. 해당 코호트는 2028~2030년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하므로 NABO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도별 지출규모 및 증감 경로에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6년 0.58조원에 2027년 0.30조원으로 총 0.88조원의 지출이 계획되었다. 이에 따르면 NABO의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002조원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0.58	0.31	—	—	—	—
국가재정운용계획(B)	0.58	0.30	—	—	—	—
						합계
차이(A-B)	0	0.002	—	—	—	0.002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사업 시행 연도에 예산액을 전액 집행 처리하고 2회계연도 후에 정산하는 구조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이전 회계연도의 정산액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어 2026년의 경우 해당연도 예산 수치를 준용하였다.

2027년의 경우 NABO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수 전망이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NABO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수 비율[44]을 곱하여 대상자 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학생 수에 무상교육 지원 제외 학교[45]의 학생 수를 차감하여 지원 대상자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25년 기준 지원 제외 학생 수가 2027년까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 인구 및 지원 대상자 비율의 적용방식 차이로 2027년 국고 지원액 전망에 0.002조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장래인구추계상 고등학생 수 대비 연도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인원 실적치의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였다.
4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포함된다.

3. 중기 재정운용 방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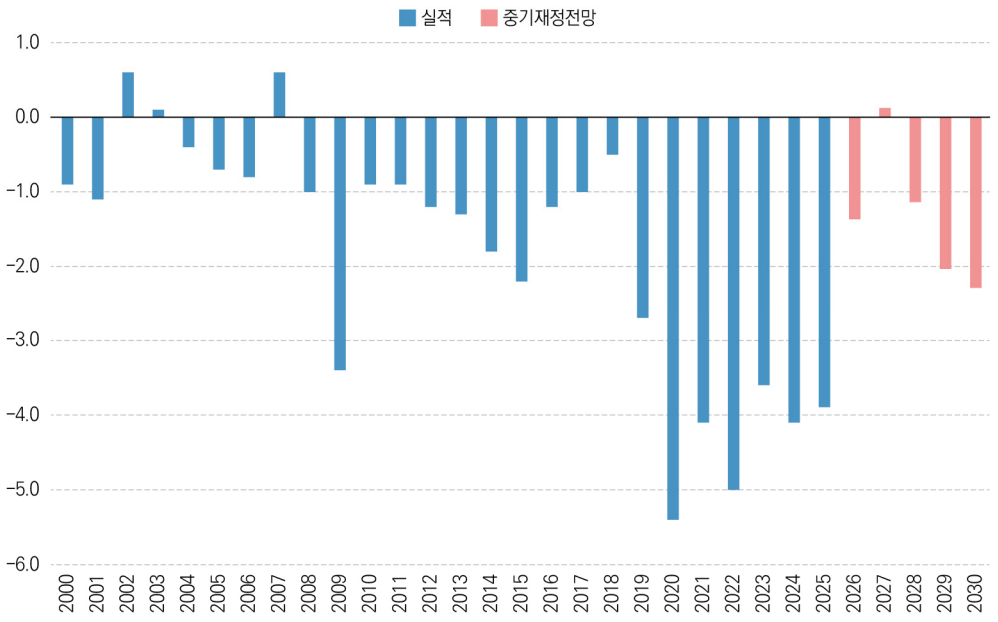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만, 2028년 이후에는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연간 41.8~92.1조원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NABO의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

먼저, NABO 중기재정전망 및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모두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할 경우 2027년에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보다 크게 개선된다.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2026년 전망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총지출은 의무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32.2조원, 재량지출은 38.6조원 증가하여 관리재정수지가 4.3조원 흑자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으로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가 3.1조원 적자이나, 2026년과 비교할 때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점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다만, 이러한 수지 개선은 2027년에만 일시적일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8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6년 내국세 실적(초과세수 발생)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2025년 내국세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2027년 대비 3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028년 전망은 2024~2026년의 경제성장률이 반영되므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량지출의 경우 2027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2028년에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2028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림 5] 관리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NABO 중기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중기재정전망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정부보다 5년 동안 51.9조원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이 일률적으로 과소 계획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부 계획과 달리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적자 규모는 현 계획보다 확대될 수 있다.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정부 계획의 경우 같은 기간 6.9%로 계획되었다. 하위 부문별로 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NABO 전망이 정부보다 5년 합계 22.7조원 크고, 사회보험은 15.3조원, 공공부조는 12.2조원, 기타복지는 1.7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보험과 기초연금의 경우 NABO 전망이 정부보다 2026~2030년 동안 각각 9.6조원, 6.4조원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수입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망기간 후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증가 가능성은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1] 중기재정전망: 복지 분야별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복지 분야	199.9	221.2	236.4	254.0	273.8	8.2
공적연금	94.9	102.9	110.4	119.2	129.6	8.1
사회보험	42.6	45.5	47.9	50.1	52.4	5.4
공공부조	47.0	56.6	62.2	67.6	73.7	11.9
기타	15.4	16.3	15.9	17.0	18.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12] NABO 중기재정전망과 정부 계획의 차이: 복지 분야별 의무지출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복지 분야 차이	3.4	7.9	10.4	13.2	17.1	51.9
공적연금	1.0	2.5	4.8	5.9	8.5	22.7
사회보험	1.8	2.8	3.7	3.6	3.4	15.3
고용보험	1.2	1.8	2.3	2.2	2.1	9.6
공공부조	0.05	2.5	2.3	3.1	4.3	12.2
기초연금	△1.3	1.6	1.3	2.0	2.8	6.4
기타	0.5	0.1	△0.4	0.6	1.0	1.7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뺀 값으로, 양(+)의 값이면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량지출은 2026~2030년 동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연평균 7.1% 증가(2026년 본예산 대비 8.3%)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4.7%임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이때 재량지출의 현행 수준을 2026년 본예산을 베이스로 하여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27년 이후 계획은 현행 수준에 비해 연간 45.7~96.8조원 큰 규모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재량지출 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재량지출 계획은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분야별로 재량지출의 확대 계획을 보면, 전체 재량지출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7.1%)보다 높은 주요 분야는 교육(10.8%), 문화 및 관광(8.9%), 사회복지(8.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2.7%), 국토 및 지역개발(8.6%) 등이다.

[표 113]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량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전체	355.5	394.1	422.8	445.5	467.3	7.1
교육	20.8	24.5	27.1	29.2	31.2	10.8
문화 및 관광	10.1	11.6	12.6	13.5	14.2	8.9
사회복지	65.1	71.5	79.8	86.4	91.6	8.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9	39.9	46.5	51.4	54.8	12.7
국토 및 지역개발	4.9	5.9	6.2	7.1	6.8	8.6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요약 및 결론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기 위해 향후 재정 추이를 항목별로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 결과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2026년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의 제도 변화, 그리고 재량지출 확대와 같은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에서 2030년 1,012.1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에서 2030년 1,035.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초반에는 국세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2029년부터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보다 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보임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26년 1,413.7조원에서 2030년 1,711.4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높은 명목GDP 수준으로 인해 2026년 43.3%에서 2030년 42.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0.8%p).

이러한 전망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양(+)의 세수효과로 인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10.4조원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총지출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이전재원을 포함한 의무지출이 132.5조원 감소하고 재량지출은 291.4조원 증가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8.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준과 비교할 때 중기재정전망의 재정수지는 총수입 증가(2027~2030년 10.4조원)에 비해 총지출 증가(158.9조원)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현행 수준에 비해 중기재정전망에서 2028년 이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 기준으로 40.0%이나, 정책 변화를 반영할 경우 4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그 기조가 유지될 경우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재정적 결과를 추계(projection)하는 작업으로 그 결과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다를 수 있다. 총수입의 경우 NABO 전망이 정부(세수 재추계 기준)에 비해 5년 동안 90.5조원 큰데, 이는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77.1조원 크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NABO가 정부보다 79.9조원 크며, 그 차이는 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5년 합계 51.9조원), 지방이전재원(5년 합계 38.0조원)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NABO 모두 전망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명목GDP 성장을 반영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0.6%에서 2030년 49.0%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같은 기간 43.3%에서 42.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전반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높은 증가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세수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규모가 큰 일부 의무지출에 대해 제도 개편을 통해 증가 추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중기재정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전망기간 후반에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과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국세수입 증가를 전제로 하는 지출 확대 계획이 재정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부록] 항목별 전망방법

1. 거시경제전망

❑ 장기 거시계량모형을 기본적인 전망 모형으로 사용

○ 장기 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총공급의 주요 결정요인들은 모형에서 내생화하고, 2030년까지 장기적 추이 판단이 어려운 모수 값들은 외생적으로 전제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기초한 외생적 성장이론을 따르며, 성장회계식(Growth Accounting)을 토대로 추정

$$Y_t = A_t L_t^{\alpha} K_t^{1-\alpha}$$

A_t: 총요소생산성, L_t: 취업자의 총노동시간, α: 노동소득분배율

- 1970~2025년의 기간에서는 HP필터의 방식으로 잠재GDP 추세를 계산하고, 2026~2030년의 잠재성장률 추이는 성장회계모형으로 결정

○ 거시변수 전망에 사용되는 노동인력 및 저축률 추정을 위하여 인구변수 내생화

- 15세 이상 성·연령별 인구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 추계값을 사용하되, 군복무 인원 등을 제외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조정
- 취업자 수는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의 장기균형 수렴을 가정하여 전망
- 근로시간은 2026년 이후 불변임을 전제
- 저축률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시나리오별 노년부양비를 반영한 회귀식으로 추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동학과 경제여건을 고려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경제

의 구조변화 고려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중기적으로는 교역조건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며, 장기적으로는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간의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

○ 금리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을 기초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하고, 기준금리와 국고채금리 간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가산하여 국고채금리를 산출

- Taylor(1993)[1]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설정이 인플레이션갭(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 목표치), 잠재성장률갭(성장률-잠재성장률), 장기균형실질금리 등을 고려하여 준칙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잠재성장률 및 전망치, 물가상승률 및 전망치, 장기균형실질금리 및 전망치 등 기초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수집하여 활용

○ 임금상승률 전망에는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 일자리 구성의 변화,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2.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1) 소득세

❑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 세목별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세부 세목별로 전망모형에 사용한 변수의 경우 명목GDP와 그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 외에도 사업소득신고율과 같은 과표양성화 변수(종합소득세), 임금근로자수 및 명목 임금상승률과 같은 고용변수(근로소득세), 금리 및 환율 등과 같은 금융변수(양도 · 이자 · 배당소득세)를 활용

○ 회귀모형 등을 통해 산출한 전망치에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근로·자녀장려금(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만 해당) 등을 반영하여 최종 징수실적 추정

1) Taylor, John B., "Discretion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 39, North-Holland, 1993.

상세세목	전망방법
근로소득세	임금근로자수, 임금, 과세표준, 실효세율 등 변수를 활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종합소득세	민간소비, 취업자수, 사업소득 신고율 등 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이연세수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반영한 조정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전망 모형 설정
양도소득세	명목GDP, 금리 등 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예금잔액 및 채권발행잔액을 회사채 금리, 명목GDP, 경상민간소비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한 후, 이에 금리 전망치의 증감율 등을 반영
배당소득세	수출, GDP, 경상민간소비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기타소득세	민간소비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사업소득세	전년 사업소득세 실적에 최근 추세 및 향후 경상민간소비 전망 증감율 등을 반영하여 전망
퇴직소득세	고령인구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에 연동
연금소득세	고령인구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에 연동

❑ 근로소득세 전망

○ 근로소득세는 먼저 임금근로자수와 명목임금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과세표준 추정 후, 과세표준 등을 설명변수로하는 회귀모형으로 결정세액을 추정하여 결정세액 증가율 전망

- log(과세표준)= f(c, log(임금근로자수), log(명목임금), 더미변수)
- log(결정세액) = f(c, log(과세표준), log(실효세율(징수액/과표)), 더미변수)

○ 결정세액 전망치에서 성과급 지급 효과, EITC·CTC 지급액 및 세법개정 세수효과 등을 차감하여 최종 근로소득세 징수액 추정

- 근로소득세 징수액 = 결정세액 - 세법개정 세수효과 - EITC · CTC 지급액
- 2026년 및 2027년의 경우, 반도체 업종 성과급 지급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 종합소득세 전망

○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사업소득 신고율, 취업자수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조정종합소득세 전망

○ 조정종합소득세 전망치에서 EITC·CTC 지급액,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등

을 차감하여 최종 종합소득세 징수실적 추정

- 종합소득세는 이연세수와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가산한 조정종합소득세 수를 기준으로 전망 모형 설정

❑ 이자소득세 전망

○ 이자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예금잔액 및 채권발행잔액을 회사채 금리, 명목GDP, 경상민간소비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전년도 이자소득세에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개인예금 및 채권발행잔액 증가율 전망치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금리 전망치의 이동평균 증감율을 적용한 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 이자소득세 실적 추정

❑ 배당소득세 전망

○ 예산연도는 연도별 배당 법인의 배당금 자료의 최신자료를 반영하여 추계

○ 이후 연도는 수출, GDP, 경상민간소비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한 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 배당소득세 실적 추정

- 2026년 및 2027년의 경우, 반도체 주요기업의 실적증가에 따른 특별배당 지급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 사업소득세 전망

○ 사업소득세는 전년 사업소득세 실적에 최근 추세 및 향후 경상민간소비 전망 증감율 등을 반영한 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등을 감안하여 최종 사업소득세 실적 추정

❑ 양도소득세 전망

○ 명목 GDP, 금리 등 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모형의 예측치를 활용하되, 최근 해외주식 거래금액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망

❑ 퇴직·연금소득세 원천분 전망

○ 퇴직소득세의 경우 최근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60세 미만/60세 이상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구분하여 전망한 후 각 전망치를 합산

- 60세 이상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은퇴자가 부담하는 세액으로 보아

연도별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 및 이전 3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0세 미만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이직자가 부담하는 세액으로 간주하여 이전 3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전망

○ 연금소득세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및 연금소득세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2) 법인세

❑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분과 원천분을 구분하여 주요 거시경제 변수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신고분은 주로 통관수출, 교역조건 등 대외여건 관련 변수와 함께 명목GDP, 설비투자 등 거시지표 등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과세표준을 전망한 후, 과세표준 추정치에 세율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추정

○ 법인세 원천분은 명목GDP, 설비투자 등을 활용하여 비금융업 일반법인의 금융자산을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

상세세목	전망방법
법인세 신고분	명목GDP, 설비투자, 통관수출 및 환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과세표준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분 법인세를 추정
법인세 원천분	명목GDP, 설비투자, 환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분 법인세를 추정

(3) 부가가치세

❑ 거시 전망(명목GDP, 통관수출입, 환율, 설비투자 등)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

○ 지방소비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2025년,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면세·영세율, 공제·감면 등의 제도개정에 따른 효과 반영

○ 조기환급 및 납부유예 계획 등에 따른 세수 변동 전망 반영

상세세목	전망방법
부가가치세	명목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4) 기타 세목

❑ 기타 국세 세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 중 상속세는 연부연납분과 당해발생분을 구분하여, 당해발생분은 사망자수, 주택매매가격 등을 활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고, 증여세는 금리, 정책변수 등을 반영하여 증여건수를 1차적으로 추정한 후, 가계금융자산 증가율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전망

- 단, 상속세의 경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에 따른 연부연납분의 세수증가를 고려하여 전망

○ 개별소비세는 세원별로 명목GDP 및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방법(유류분, 자동차분 등)과 최근 출고량 추이를 반영하는 방법(담배분) 등을 통하여 과세품목별로 전망한 후 합산

○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명목GDP 및 금리 등을 반영한 회귀모형을 통하여 전망

○ 인지세는 명목GDP 성장률, 원화대출금 증가율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하여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휘발유 및 경유 수요량 전망치에 유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전망

○ 관세는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환율 전망, 최근 실효세율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망

상세세목	전망방법
상속세	연부연납분과 당해발생분을 구분하여 당해발생분은 사망자수, 주택매매가격 등을 반영한 모형을 통해 전망 -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 등으로 인한 연부연납분의 증가를 고려하여 전망
증여세	금리, 정책변수 등을 반영하여 증여건수를 1차적으로 추정한 후, 가계금융자산 증가율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액을 전망
개별소비세	품목별로 명목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모형(유류분, 자동차분 등)이나 최근의 출고량 추이(담배분)를 반영하여 전망
증권거래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거래대금을 명목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시장별 세율 반영
인지세	명목GDP 성장률, 원화대출금 증가율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최근 자동차 보급 추세 및 경제여건 등을 반영한 휘발유·경유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에 유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전망
관세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최근의 실효세율 추이,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

나. 국세외수입

(1) 사회보장성기금

(가)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기금운용수익, 기타수입으로 구성

❑ 사회보장기여금 추계

○ 사회보장기여금은 연도별·성별·연령별·가입유형별 가입자 수에 보험료 단가, 징수율 및 납부기간(12개월)을 적용하여 산출

- (가입자 수) 성별·연령별·가입유형별·가입기간별로 구분하여, 가입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가입자 유형별 이동률, 신규가입률, 사망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
- (보험료 단가) 성별·연령별·가입유형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에 NABO의

임금상승률 전망치(가입유형별로 구분)를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계

❑ 기금운용수익 추계

○ 현금주의 기준의 기금운용수익을 적용

- 2026년은 7월까지의 수납 실적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2027~2030년은 정부 전망과 동일 가정

❑ 기타수입 추계

○ 과거 기타수입 징수 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전망

(나) 사학연금

❑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국가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 기타수입으로 구성

❑ 사회보장기여금 및 국가부담금 추계

○ 사회보장기여금은 연도별·성별·연령별·직군별 재직자 수에 보험료 단가 및 납부기간(12개월)을 적용하여 산출

- (재직자 수) 성별·연령별·직군별(교원·일반직원·병원직원)로 구분하여 직군별 특성에 따라 학령인구 및 학생 1인당 교직원 수 비율 등을 반영하거나 또는 의료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계
- (보험료 단가) 성별·연령별·직군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에 NABO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가입자 임금상승률 전망치(전임금 상승률과 직군별 상승률의 차이 추세를 고려)를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직군별로 연금·재해보상급여·퇴직수당에 대한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기금운용수익 추계

○ 현금주의 기준의 기금운용수익을 적용

- 2026년은 7월까지의 수납 실적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2027~2030년은 정부 전망과 동일 가정

❑ 기타수입 추계

○ 과거 기타수입 징수 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전망

(다) 고용보험기금

❑ 가입자 추계

○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최근 실적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수입 추계

○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 가입자의 보수총액은 가입자 수 증가율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망
- 실업급여 보험료율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를 가입자가 선택하므로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에 근거하여 산출함

○ 기금운용수익은 전년도 말 적립금에 최근 기금운용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가입자 추계

○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는 최근 실적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 수입 추계

○ 일반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적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평균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 평균 보험료율은 보험료 수입을 보수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고, 보수총액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추정함
- 산재보험료율은 평균 보험료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노무제공자, 중소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는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에 적용 대상자 수를 곱하여 산출함

○ 기금운용수익은 전년도 말 적립금에 최근 기금운용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2)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항목 중 연금기여금, 지방자치단체연금부담금은 세외수입의 경상이전수입에 해당

○ 연금기여금은 가입자 수 전망치에 전망기간 동안의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기준소득월액,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출

○ 지방자치단체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별로 최근 결산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활용하여 산출

- (연금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연금부담금을 앞서 산출한 연금기여금에 최근 결산기준의 연금부담금 배율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적용
- (보전금) 퇴직급여에 드는 비용을 연금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지출액과 연금기여금 등의 수입액의 차를 구하여 보전금을 산출한 후 최근 결산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적용
- (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금 등)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금 등의 지출액을 산출한 후 최근 결산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적용

❑ (군인연금) 군인연금기금의 수입항목 중 연금기여금은 세외수입의 경상이전수입에 해당

○ 연금기여금은 계급별 가입자 수 전망치에 전망기간 동안의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기준소득월액,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 7%를 곱하여 산출

(3) 기타 국세외수입

❑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등으로 구분

○ 주요 수입관별(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등)로 시계열 회귀분석(자기회귀시차모형)을 통해 전망

- 수입관별로 명목GDP 증가율, 명목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 등 설명변수를 달리하여 전망하며, 전망치는 Hodrick-Prescott 보정을 활용하여 추세 주변의 변동을 제거하여 최종 산출
- 한국은행잉여금 등 일부 수입은 등락이 심하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별도로 전망

❑ (기금수입)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수입, 그리고 기타 기금수입으로 구분

○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은 연기금별 전망모형을 통해 전망

○ 기타 기금수입은 주요 수입관별(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로 연기금별 전망모형과 시계열 회귀분석 등을 통해 전망

- 시계열 회귀분석의 경우 수입관별로 명목GDP 증가율, 명목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 등 설명변수를 달리하여 전망하며, 전망치는 Hodrick-Prescott 보정을 활용하여 추세 주변의 변동을 제거하여 최종 산출

3. 총지출 전망

가. 의무지출

(1) 공적연금

(가) 국민연금

❑ 연금급여 지출은 급여 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장애연금·유족연금 급여와 각종 일시금 등

❑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추계

○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가입자에서 출발하여 급여 유형별로 수급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수급자로 전환

- 급여 유형별 주요 수급조건에는 연령, 가입기간, 장애발생, 사망 등이 포함되며, 이를 추정하기 위한 발생률·충족률 등을 곱하여 연도별 신규 수급자 수 추계
- 일시금을 제외한 연금급여의 경우 신규 수급자 수에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 수 추계

❑ 급여별 지급 단가 추계

○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A값), 수급자의 가입기간, 가입기간의 소득(B값) 및 소득대체율을 활용하여 산출

-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진 연금 급여별 지급률을 적용

○ 연금수급이 개시된 이후의 연금급여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연금 급여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일시금의 경우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자(또는 가입자였던 유족 등)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의 소득,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

(나) 사학연금

❑ 사학연금의 의무지출은 급여 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지급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사학연금의 연금급여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포함)·재해보상급여·퇴직수당

❑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추계

○ 성별·연령별·직군별 가입자에서 출발하여 급여 유형별로 수급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수급자로 전환

- 급여 유형별 주요 수급조건에는 연령, 재직기간, 재해발생, 퇴직, 사망 등이 포함되며, 이를 추정하기 위한 발생률·충족률·선택률 등을 곱하여 연도별 신규 수급자 수 추계

- 일시금을 제외한 연금급여의 경우 신규 수급자 수에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 수 추계

❑ 급여별 지급 단가 추계

○ 법으로 정해진 급여별 지급률을 적용

○ 연금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재직기간, 재직기간의 소득, 지급률 등을 활용하여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한 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에 대한 연금액을 산출

(다)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의 의무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로 구분되고 2016년「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인한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추계

❑ 퇴직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일시금 등)와 퇴직수당은 급여별 수급자 수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곱하여 추계하고 재해보상급여는 퇴직급여 총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퇴직급여의 경우,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추계와 급여별 1인당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전망

○ 기수급자의 경우, 연도별로 추계된 인원에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급여별 1인당 평균 금액을 곱하여 산출

- 2025년 기준 성별·연령별 기수급자 수에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을 추계하고, 퇴직연금 기수급자 사망 시 유유족률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자로 전환
- 2025년 기준 급여별 1인당 평균 금액은 이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

○ 신규 수급자의 경우,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퇴직자 수와 급여별(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1인당 평균 금액을 곱하여 산출

- 연도별 가입자 수(최근 공무원 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정)에 직종별·성별·연령별 퇴직률과 사망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수와 사망자 수를 추계

- 2025년 기준 직종별·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적용하고 급여별 산식을 적용하여 직종별·재직기간별 1인당 평균 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전망기간 동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

(라) 군인연금

❑ 군인연금의 의무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로 구분되고, 퇴직급여(퇴역연금, 유족연금, 퇴직일시금 등)와 퇴직수당은 급여별 수급자 수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곱하여 추계하고 재해보상급여는 퇴직급여 총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퇴직급여의 경우,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원추계와 급여별 1인당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전망

○ 기수급자의 경우, 연도별로 추계된 인원에 퇴역연금·유족연금 등 급여별 1인당 평균 금액을 곱하여 산출

- 2025년 기준 기수급자 수에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을 추계하며 퇴역연금 기수급자 사망 시 유유족률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자로 전환
- 2025년 기준 급여별 1인당 평균 금액은 이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

○ 신규 수급자의 경우, 계급별 전역자 수와 급여별(퇴역연금, 퇴직일시금 등) 1인당 평균 금액을 곱하여 산출

- 연도별 계급별 전역자 수에 계급별 정상전역 비율, 상이전역 비율, 연금선택률 등을 적용하여 급여별 수급자 수를 추계
- 2025년 기준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상승률을 적용하고 급여별 산식을 적용하여 계급별 1인당 평균 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전망기간 동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

(2) 사회보험

(가)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구분되고,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휴가 급여로 구분됨

❑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유형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추계하되, 지급단가는 최근 지급 추이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지급기간은 최근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실업자 수 전망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추정하고, 이직시기와 종사상 유형, 기초일액 구간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산출
- ○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 수는 구직급여 수급자 수 중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비율과 최근 수급자 수의 추이를 고려하여 산출
- ○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자 수는 최근 수급자 수의 추이를 고려하여 산출
-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급여별 수급자 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출생아 수 전망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되, 최근 수급자 수 추이와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

(나) 산재보험

❑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연금으로 구성됨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신규 수급자와 계속 수급자로 구분하여 최근 수급자 수의 추이와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

- ○ 요양급여 수급자 수는 재해율을 토대로 산출하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수급자 수는 요양급여 대비 동 급여의 비중과 각 급여별 수급자 수의 추이 등을 토대로 산출
- ○ 급여별 지급단가는 각 급여별 평균 지원금액을 토대로 수가인상률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

(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나, 보험료 수입에 연동한 국고지원금[2]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이하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3]이 건강보험 의무지출 항목에 포함

❑ 국고지원금 및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전망은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에 기초하며, 건강보험료 수입은 직역별 건강보험료 가입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 개월 수(12개월), 건강보험료율, 징수율을 곱하여 전망

○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전망

- 가입자 유형별·연령군별(5세 단위)로 과거 추이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 변화분을 반영하여 각각 전망

○ 1인당 보수·소득월액

- 직장가입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지역가입자는 연령군별(5세 단위) 과거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 직장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최근 소득보험료 증가율에 따라 증가

○ 건강보험료율 전망

- (2027년) 기결정 보험료율 7.19% 준용
- (2028~2030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정수준(1.5% 내)으로 유지한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에 따라 2026년 인상률(1.48%) 유지 가정

❑ 국고지원금

○ (일반회계) 2027년 예산안 상 국고지원율(12.3%)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산출하며, 담배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가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 수입액은 개별소비세 담배분 증가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준용하여 전망

❑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부 부처 공무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 수입 전망에서 도출된 전체 공·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사업에 포함된 예산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부 부처 공무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 수입 전망에서 도출된 전체 공·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사업에 포함된 예산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예산사업인「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이 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임

○ 세부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이하 “국고지원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이하 “공·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이하 “타법 의료급여 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이하 “사업관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 운영(이하 “재무회계프로그램”)이 있음

❑ 국고지원금

○ 2026년은 예산액과 같은 규모로 전망하였고,[4] 2027년 이후 국고지원금은

4) 정부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예산을 99% 이상 집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전망액을 예산액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2027년의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보험료 수입의 18.9%를 적용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5]에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을 따라 동결을 가정하고, 2028년 이후에는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이를 반영

❑ 공·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대비 공·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 타법 의료급여 국가부담금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 후 국가부담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65세 인구 대비 각 연령군별(5세단위)·서비스유형별(시설, 재가)·등급별(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비중을 산출한 뒤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산출
- 지출은 위 수급자 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3) 공공부조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 전망 대상 사업은 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주거급여 등 총 5개 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급여항목별(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주거급여)로 대상자 수(대상가구 수)를 산출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 향후 중위소득 기준 소득분포가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생계급여

○ 유형(일반·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일반급여의 경우 수급가구 수에 급여단가를,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지출액을 산출하고, 총지출액에 국고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평균보조율인 83.31%가 유지되는

5)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전망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것으로 가정

○ 수급가구 수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 결과에 과거 전체 가구 수 대비 수급가구 수 비율, 전체 수급가구 수 대비 가구원수별 가구 수 비율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하고, 시설수급자 수는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과거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

- 2026년 현재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추정한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과거 선정기준 대비 평균 수급액 비율 추이를 적용하여 산출

- 2027년은 기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2028년부터는 NABO의 명목임금의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가정

❑ 의료급여

○ 대상자 수

- 전체 인구 수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비중 추이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반영하여 산출
- 대상자는 1종·2종·타법1종의 종별로 세분화하여 산출
- 이때, 독립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타법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수 대비 평균 비중을 적용
- 제도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수급자 수는 2027년 예상 추가 수급자 수에 장래인구추계 상의 인구증가율을 적용

○ 의료급여 단가

- 1종·2종·타법의 종별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GDP 증가율을 최근 3년 종별 평균 단가증가율로 스케일 조정한 값을 이용

○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 기준 75.7%을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로 나누어 각 항목별 교육급여 지급액을 산출

○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교육급여 항목별·학교급별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한 뒤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각각 곱

하여 산출

- 수급자 비율이 매년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0.1~0.16%p) 증가폭을 가산
- 지급단가는 기준 단가에 최근 3년 단가 증가율을 적용

❑ 해산·장제급여

○ 급여별로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지출액을 추계한 후, 총지출액에 국고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평균보조율인 83.31%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수급자 수는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수 비율과 관련 연령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수 대비 해산·장제 수급자 수 각각의 비율 추이를 반영하여 산출

○ 급여단가는 2030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주거급여

○ 대상가구 수

- 주거급여 수급대상가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서,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료, 수선유지급여 가구의 경우 주택보수비용 지원
- 임차가구 수는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2018~202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중위소득 이하 임차가구 비중을 추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자료 및 기초수급자 자료를 병합한 국토교통부의 임차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 대비 수급가구 평균수급률을 기초로 전망
- 자가가구 수는 임차가구 수 대비 비중이 일정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실적치의 평균 비중을 적용

○ 주거급여 단가

-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 월평균 단가와 연평균증가율을 바탕으로 추산
- 자가가구 보수비용은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하여 추산

○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 기준 평균 83.31%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나)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추계

○ 수급자 수는 장래인구추계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상자 비율(70%)을 적용한 후, 과거의 수급률, 공적연금 수급 유형별, 수급 가구 유형(단독·부부 동시 수급)별, 전액·감액 수급 유형별 수급자 수 비중 추이를 적용하여 추계

○ 기초연금급여는 국민연금·직역연금 수급 여부, 가구 내 단독 수급 또는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전액 또는 감액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수급하는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수급 유형별로 수급자 수와 급여 단가를 각각 추정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 전액 수급자가 수급하는 급여(기준연금액)는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감액 수급자가 수급하는 급여는 수급 유형별로 과거 기준연금액 대비 감액된 급여액의 비율 추이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
-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평균보조율인 86.2%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제도변경에 따른 소득계층별 급여 단가는 과거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전액 수급액 대비 감액 수급액 비율의 대리값(proxy)을 도출한 후 해당 추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다) 장애수당(기초) 및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기초)

○ 장애수당(기초)은 유형별(재가 수급과 시설급여 수급) 수급자 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후, 총지출액에 국고보조율 적용

- (수급자 수)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의 만 18세 이상 인구에 장애발생률과 수급대상자 비율을 적용한 후, 재가급여 수급 장애인 비율과 시설급여 수급 장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유형별 단가) 유형별 1인당 지원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

- 평균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평균보조율인 67.0%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7년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수당(기초)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연령집단별·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후, 총지출액에 국고보조율 적용

- (수급자 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의 만 18세 이상 인구에 중증장애인 비율과 수급자 비율을 적용한 후, 연령집단별(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유형별(생계·의료급여 재가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시설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특례 등)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급여 단가) 기초급여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였고, 부가급여의 경우 급여 단가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
- 평균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평균보조율인 67.0%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7년부터 대상자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상자 수를 추계하여 반영

- 3급 단일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기초급여의 50%, 부가급여의 75%) 반영

(4) 기타 복지

(가) 보훈급여

❑ 전망 대상 사업은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보철구지급,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등 총 15개 의무지출 세부사업임

❑ 보상금

○ 보상금은 보상금과 부가수당으로 구분하여 추정

- 보상금 및 부가수당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3계층으로 크게 구분한 후, 본인과 유족, 성별·연령별 현원, 진입자 수, 사망자 수, 이탈자 수 자료를 활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유족 별로 진입·소멸 패턴이 상이하여, 각각의 진입·소멸 패턴에 따라 Bass확산 모형, Exponential Dacay모형, Gamma분포, Logistic분포 중 적절한 모형을 채택함[6)]
- 2025년 결산 기준 대상·훈격·급수별 지급 대상자 수를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이후 추계모형의 연도별 변화율을 적용하여 전망기간의 대상·훈격·급수별 지급 대상자 수를 추정함
- 2027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단가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지급단가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대상·훈격·급수별 지급단가를 추정한 후, 지급 대상자 수를 곱하여 보상금 및 부가수당을 추정

❑ 간호수당

○ 대상자는 구법대상자(4개 등급), 신법대상자(2개 등급)로 구분하여 각각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는 정책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 대신 최근 5년간 지급단가 연평균 증가율 5.2%를 적용

❑ 6·25자녀수당

○ 6·25자녀수당은 과거 보훈수혜정도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생계곤란자,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대상 등 5개로 구분한 후, 성별·연령별, 대상자 실적치에 사망률, 진입률, 이탈률을 적용하여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는 정책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 대신 최근 5년간 지급단가 평균 증가율을 적용

❑ 무공영예수당

---

6)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5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보훈급여 재정전망모형 개선」의 모형을 활용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5개 등급(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별로 구분하여 각각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지급단가는 보상금 단가 상승률과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률 적용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신규진입이 없어 2025년 말 기준 1세별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국가데이터처 연령별 남자 사망률을 적용

◦ 지급단가는 보상금 단가 상승률과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4·19혁명공로수당

◦ 대상자 수는 지수함수모형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지급단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사망일시금

◦ 수시보상금 성격의 사망일시금은 자료획득이 가능한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재해보상금

◦ 대상자는 2025년 결산 인원 2명을 일정하게 유지[7)]

◦ 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지급단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보훈병원진료

◦ 대상자는 국비진료, 감면진료로 구분하여 각 2025년 실적에 장기추계모형에서 추정된 대상자 수 증감률을 적용하고, 2027년에 2025년 미지급금을 반영하여 추정

◦ 연간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

7) 재해보상금은 2022년 1월부터 국방부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관 결정되어 지급인원이 173명(2021년)에서 2명(2024년)으로 축소되었음

❑ 위탁병원진료

○ 대상자는 국비진료, 응급통원진료, 감면진료로 구분하여 각 2025년 실적에 장기추계모형에서 추정된 대상자 수 증감률을 적용하고, 2027년에 2025년 미지급금을 반영하여 추정

○ 연간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 보철구지급

○ 대상자는 보철구 지급과 수리로 구분하여 2025년 실적에 장기추계모형에서 추정된 대상자 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 연간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 고엽제환자검진

○ 대상자는 2025년 실적에 장기추계모형에서 추정된 대상자 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 연간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은 2025년 실적에 장기추계모형에서 추정된 대상자 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평균지급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중기복무제대군인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역자 산출 후 전역자 중 전직지원금 신청률, 지급률, 지급단가, 지급개월수(6개월)를 곱하여 산출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자는 2025년 실적에 장기추계모형에서 추정된 대상자 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
-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전역자 중 신청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청률 적용
-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지급률 적용
- 지급단가는 2026년 예산 기준 중기제대군인 월 58만원(6개월간 348만원), 장기제대군인 월 81만원(6개월간 486만원)을 적용하고, 국회예산정

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 장기추계모형을 적용하여 복권기금 기타잡수입을 추정

○ 최근 5년간 복권기금 기타잡수입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사업 예산 비율의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

(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영아수당)

❑ 아동수당

○ (개편 전) 수급자 수에 단가 및 지급 개월 수(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후, 총지출액에 국고보조율 적용

- 수급자는 13세 미만에 도달하기 까지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되는 것을 반영하고, 2025년까지의 각 세별 주민등록인구(거주자) 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각 세별 사망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

  *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출생아 수 증가 및 NABO의 2027년 출생아 수 전망치를 고려하였고, 이러한 추이를 2028~2030년 수급자 수 추정 시 반영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 거주 아동의 비율은 시·도가 실시하는 시군구 장래인구추계상의 비율을 적용

- 단가는 월 10만원을 적용하되, 가산 지역 거주 아동에 대하여 해당 단가 적용

-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평균 국고보조율인 76.08%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편 후) 2027년 6월생까지는 개편 전 제도 적용, 2027년 7월생부터 해당되는 수급자 수에 단가 및 지급 개월 수(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후, 총지출액에 국고보조율 적용

- 전체 수급자 수 및 국고보조율은 개편 전의 방식과 동일

- 전망 수행 시점 기준으로 우대지역 범위 및 가정보육의 정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우대지역 거주 아동 비율 및 가정보육 아동 비율은 정부의

2027년 계획안에 반영된 비율을 지속 적용

- 단가는 유형별로 해당 단가 적용

❑ 부모급여(영아수당)

○ (개편 전) 수급자 수에 단가 및 지급 개월 수(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후, 총지출액에 국고보조율 적용

- 수급자는 만 2세 미만 아동이며, 출생아 수 실적치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출생아 수 전망치를 보정하여 산출

*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출생아 수 증가 및 NABO의 2027년 출생아 수 전망치를 고려하였고, 이러한 추이를 2028~2030년 수급자 수 추정 시 반영

- 2025년 가정 보육 아동과 시설 보육 등 이용 아동의 비율을 적용
- 단가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적용하되, 시설보육 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는 관련 사업의 최근 단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
- 국고보조율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평균 국고보조율(전액 지원 69.11%, 차액 지원 70.2%)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편 후) 2027년 6월생까지만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적용하여 추정

- 2027년 7월부터 1개월령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정을 고려

(5) 지방이전재원

❑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으로 구분

❑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분 제외)에서 추가세수를 차감한 금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를 합산하여 산출

○ 단, 추가세수는 내국세 전망이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에만 산식에 포함

- 내국세 추세치는 전망연도(t년) 기준 2년전 실적에 이전 10년(t-12년~t-2년) 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 전망치에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

○ 단, 2027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한 금액(75.7조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78.9조원으로 산정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3~5세 전망인구에 연령별·기관별 취원율을 곱하여 대상 인원 산출 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연령별·기관별 취원율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만 3~5세 전망인구 대비 취원아동 수의 비율로, 2026년 실적치에 최근 3년 연평균 변화폭을 각각 가산
- 지급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3~5세 전망인구에 연령별·기관별 취원율을 곱하여 대상 인원 산출 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연령별·기관별 취원율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3~5세 전망인구 대비 취원아동 수의 비율로, 2026년 실적치에 최근 3년 연평균 변화폭을 각각 가산
- 지급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고등학교 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전망기간은 2027년까지로 함

○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비율을 곱하여 대상 인원 산출 후 단가와 국가부담 비율을 곱하여 산출

- 대상자 비율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 대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의 비율로, 해당 값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한 것으로 가정
- 국가부담 비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6년 30%, 2027년 15%로 함

(6) 이자지출

❑ 이자지출 추계

○ 이자지출은 국고채에 대한 이자지출과 기타 이자지출(국민주택채에 대한 이자지출, 청약저축에 대한 이자,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에 대한 이자, 우체국예금에 대한 이자 등)로 구분

○ 국고채에 대한 이자지출은 전년도 이자지출에 신규 국고채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산출

- 신규 국고채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에 발행연도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이자율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와 명목 국고채(3년 만기) 이자율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추정

○ 우체국예금에 대한 이자지출은 연도별 수신고(평잔)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우체국예금의 수신고(평잔)는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이자율은 NABO의 국고채금리(3년) 전망치에 근거하여 추정

나. 재량지출

❑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을 반영하되, 2026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금액 반영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더서울미디어(주)(tel 02·2274·358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SN 3058-6305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2328-10
ISSN	3058-630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